적극
행정

인사혁신처 국무조정실 행정안전부

적극적인 자세로 어려움을 극복하고 국민 행복을 위해 끝까지 정진한다

# 적극행정

적극적인 자세로
어려움을 극복하고
국민 행복을 위해
끝까지 정진한다

인사혁신처 국무조정실 행정안전부

적극적인 자세로

어려움을 극복하고

국민 행복을 위해

끝까지 정진한다

CONTENTS

## Chapter Ⅰ 적극적인 자세로


6 미운 우리 석탄회, 적극적인 기술 개발로
국산 시멘트·친환경 플라스틱 배관으로 재탄생!

11 창의적인 생각, 적극적인 행동!
폐유리, 토목·건축자재로 재활용한다!

17 바다 쓰레기가 돈이 되는 과자 상점,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적극적인 시민참여로
해변 쓰레기를 줄이다.

21 버릴 흙, 쓰는 흙으로 바꿔 적극적으로
예산절감에 앞서다.

25 재생자전거 온라인 판매, 적극적인 지원으로
도시미관도 개선·탄소 배출 저감에 기여!!

29 버려지는 열로 온실을 따뜻하게! 적극행정으로
농민의 마음도 따뜻하게!

34 고속도로 이정표 100미터 단위 설치와 119 위치
표기 접수 시스템 구축으로 신속한 출동 실현

39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대기배출가스 저감!
소각시설 세척 장치 특허 개발


## Chapter Ⅱ 어려움을 극복하고


44 어려움에 빠진 임금체불근로자를
더 넓고, 빠르게 보호

49 제도적 허들을 넘어, 건설 중인 건축물 내 현장
사무소 설치 문제 해결

54 DNA 감정 수요 폭증·부족한 인프라,
「신속 DNA 분석기」 개발로 극복

60 우크라이나 전쟁 중 미사일과 시가전을 뚫고
우리 교민들의 안전한 출국을 지원하다.

64 지방 소멸의 위기, 청년에게서 답을 찾다!

69 수산물의 안전을 지키는 신속 검사 키트로
부정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다.

72 사각지대에 있는 숨은 피해 소비자까지 구제하라!


## Chapter Ⅲ 국민 행복을 위해


78 잠자고 있는 당신의 돈을 돌려드립니다.
행복을 찾아드립니다.

83 갈등에서 협력으로, 도민과 자연이 함께 누리는
깨끗한 안양천 조성

88 민·관이 함께 해결한 교통 정체, 함께 누리는 행복

94 개인정보를 보다 안전하고 유용하게,
국민의 삶을 보다 편하고 유익하게

101 한 장의 교통카드로 전국의 대중교통을
편리하게 이용하다.

106 아플 땐 지하철을 방문하세요.
국민 건강 서비스, 행복 서비스

110 강릉의 안심 여행 서비스
"해피하게 오감" 프로젝트

115 지방세 납세증명서도 무인민원발급기에서?
국민 불편 해소·국민 편익 증진


## Chapter Ⅳ 끝까지 정진한다


122 안되면 될 때까지!
도심 외곽 개발 소외지역 도시가스 보급 확대

126 재난안전 감시망 구축으로 어선 사고 예방 등
국민의 안전을 위해 끝까지 정진하다.

132 IOT 전파탐지 기술로 몰래카메라 디지털 성범죄
근절에 끝까지 도전하다.

2023년
**적극행정 우수사례집**

# CHAPTER Ⅰ

## 적극적인 자세로


01 공공 부문 | **한국남동발전**
- 미운 우리 석탄회, 적극적인 기술 개발로 국산 시멘트·친환경 플라스틱 배관으로 재탄생!

02 공공 부문 | **한국환경공단**
- 창의적인 생각, 적극적인 행동! 폐유리, 토목·건축자재로 재활용한다!

03 공공 부문 | **한국관광공사**
- 바다 쓰레기가 돈이 되는 과자 상점,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적극적인 시민참여로 해변 쓰레기를 줄이다.

04 지자체 부문 | **전북 임실군**
- 버릴 흙, 쓰는 흙으로 바꿔 적극적으로 예산절감에 앞서다.

05 지자체 부문 | **서울특별시**
- 재생자전거 온라인 판매, 적극적인 지원으로 도시미관도 개선·탄소 배출 저감에 기여!!

06 중앙 부문 | **농림축산식품부**
- 버려지는 열로 온실을 따뜻하게! 적극행정으로 농민의 마음도 따뜻하게!

07 지자체 부문 | **전라북도**
- 고속도로 이정표 100미터 단위 설치와 119 위치표기 접수 시스템 구축으로 신속한 출동 실현

08 지방공사공단 부문 | **창녕군 시설관리공단**
-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대기배출가스 저감! 소각시설 세척 장치 특허 개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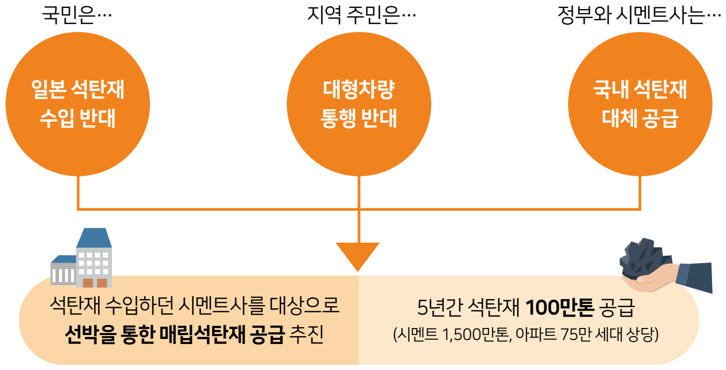
# 미운 우리 석탄회, 적극적인 기술 개발로 국산 시멘트·친환경 플라스틱 배관으로 재탄생

01 한국남동발전

석탄발전소에서 전기를 생산한 후에는 많은 양의 석탄재가 부산물로 발생되고 있다. 하지만 석탄재는 폐기물로 분류되어 막대한 처리비용이 발생하고 자원으로서 효율적으로 순환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한국남동발전은 석탄재를 유효한 자원으로 생각하며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자원순환 사업을 보다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이 중 일본의 석탄재 수입을 저감할 수 있는 공급경로를 제도적으로 개척하고 선도적으로 석탄재로 친환경 플라스틱을 생산하는 기술을 개발한 사례는 국민의 생활공간의 신뢰를 회복하고 비용절감을 비롯해 중소기업 육성, 일자리 창출하는 다양한 성과를 거두어 주목받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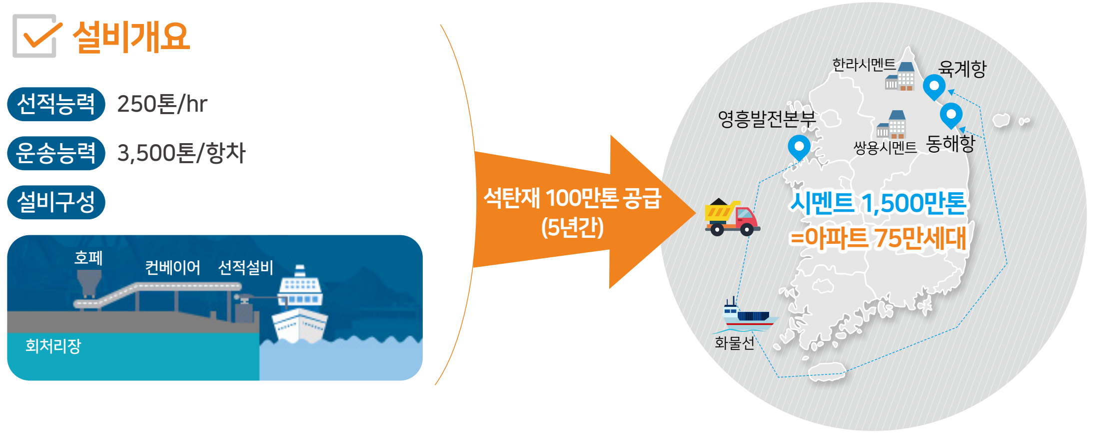

**국민체감**

- 수입대체로 인한 국가 자원순환 개선 기여
- 일본 석탄재로 만든 시멘트 공급 억제로 국민 불안감 해소
- 대형차량 통행 감소
- 적극행정으로 5개월 사업지연 단축
  - 이해관계자 손실 26억 원 상쇄
  - 매립부담금 8억 원 절감

###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적극행정, 석탄재 해상반출 규제를 혁신하다

2000년 초반부터 일본에서 석탄재가 국내 시멘트 원료로 수입되기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2011년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사고 이후 방사능에 노출된 석탄재가 수입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되어 왔고 2018년 일본산 폐기물 수입이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며 국민들은 일본산 석탄재 수입에 불안감과 우려를 표현하였습니다.

영흥발전본부는 회처리장 잔여용량 부족 문제로 신규 회처리장 건설을 추진해 왔지만, 폐기물 처분 부담금 제도 시행, 석탄재 재활용목표 상향 등 환경정책 변화와 지역사회의 수용성 문제로 회처리장 건설계획을 철회하였습니다. 그리고 석탄재 재활용을 더욱 증대하고자 일본에서 석탄재를 수입하는 시멘트 회사를 대상으로 영흥발전본부의 석탄재를 공급하는 방안을 추진하였습니다. 하지만 지역주민은 석탄재를 운반하는 대형차량 통행량 증가를 원하지 않았고 서해안에 자리하고 있는 발전소와 동해안에 위치하는 시멘트 공장의 지정학적 문제는 경제성 있는 물류방법을 찾는 데 큰 장벽이 되었습니다.




### 땅에 넘어지면 땅 짚고 일어나고, 행정에 넘어지면 적극행정으로 일어난다!

남동발전은 석탄재를 해상으로 공급하는 방안을 추진하였습니다. 하지만 석탄재를 공급하는 경로(선박+차량)에 불가피한 운반업체 변경이 「폐기물관리법」 위반이라는 법률적 해석으로 사업은 무산될 위기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남동발전은 이러한 위기 앞에서 환경부, 시멘트사와 머리를 맞대고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한 끝에 석탄재 해상공급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남동발전은 여기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입법과정의 불가피한 지연에 약 5개월의 사업이 순연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환경부에 '적극행정 사전컨설팅 감사'를 신청하였으며 해당 건은 인용되어 조기에 석탄재 수입 대체사업을 착수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남동발전은 현재 5년간 100만톤의 석탄재 수입 대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100만톤의 석탄재는 시멘트 1,500만톤을 생산할 수 있는 원료로, 이는 아파트 75만 세대를 건설할 수 있는 규모입니다. 이 같은 노력 끝에 국민의 생활공간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데 주요한 성과를 창출할 수 있었습니다.





### 수입에 의존하는 플라스틱 원료, 석탄재로 대체하다

또한, 남동발전은 세계 최초 석탄재 산업소재 설비를 통해 발전소 연료를 태우고 버려지는 석탄재를 연간 약 24만톤을 재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석탄재 재활용 과정에서 10㎛ 이하의 미세입자를 추출하여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고가의 플라스틱 원료를 20% 대체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플라스틱 원료를 이용해 플라스틱 바구니, 옷걸이를 제작하여 취약계층에게 기부하기도 했습니다.

남동발전의 핵심발전소인 영흥발전본부에서는 수명이 끝난 플라스틱 폐배관을 연간 35톤씩 매각처리하고 있어 이 폐기물을 재활용할 수 있는 연구에 착수했습니다. 폐배관의 경우 노후화로 인해 강도가 저하되어 재사용이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연구 끝에 석탄재를 섞어 약해진 강도를 보강하는 해결책을 찾아낸 것입니다. 이렇게 발전소 폐기물 100%를 재활용함으로써 기존 수입산 플라스틱 원료 대비 단가를 55% 낮추는 성과를 이루어 현재 발전5사를 시작으로 친환경 플라스틱 배관 판로를 개척 중입니다.

발전소 폐기물을 100% 재활용하여 개발한 원료는 가격경쟁력, 사회적 가치창

출 등 그 성과를 인정받아 국내 다수 대기업과 업무협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배관뿐만 아니라 다양한 플라스틱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신호등 커버 등 여러 시제품을 생산하여 테스트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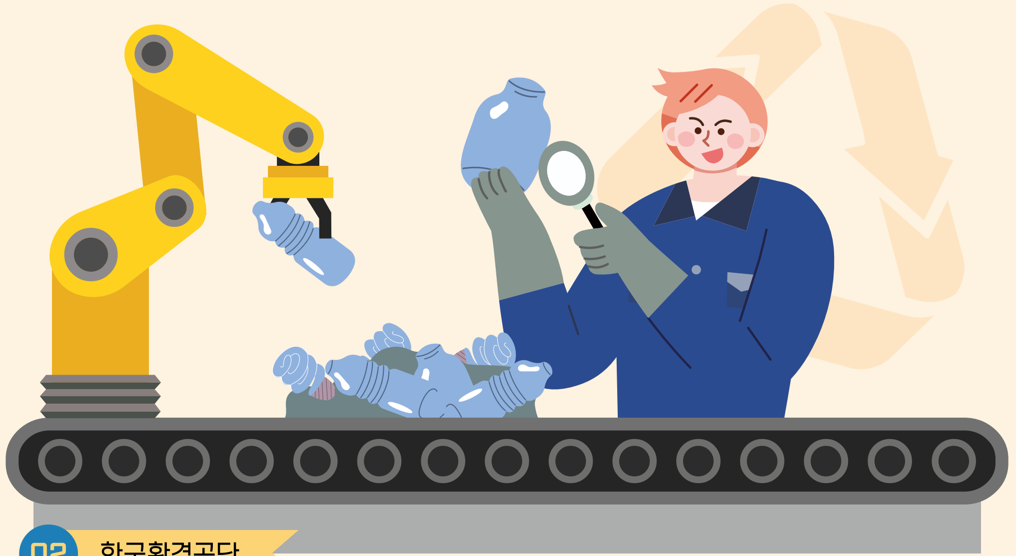
남동발전은 중소기업(예담케미칼)과의 연구개발을 통해 폐배관 재활용 기술개발에 성공하여 중소기업과의 동반성장을 이끌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기 캐릭터인 '펭수'와 손잡고 석탄재 재활용제품 마케팅 활동에 박차를 가하여 국민들에게 친근하게 다가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담당자 한마디**

**홍민철·하지우** | 한국남동발전 영흥발전본부

시멘트 원료로 석탄재를 공급하기 위한 준비를 모두 마치고 기다리던 중 관련 법 개정이 지연된다는 소식을 접했을 때 이해관계자의 경영손실과 사업무산 위기에 등골이 서늘했습니다. 하지만 환경부와 협의 과정을 거치며 적극행정 지원제도를 활용할 수 있어 사업을 더욱 과감하게 추진할 수 있었고, 이를 통해 적기에 선박을 통해 석탄재를 해상으로 성공적으로 공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창의적인 생각, 적극적인 행동!
# 폐유리, 토목·건축자재로 재활용한다!



**02 한국환경공단**

수입 맥주병, 와인병, 화장품병 등의 혼색 유리병은 재활용이 어려워 매립·분해되는 데 100만 년이 소요된다. 삼색병은 새 유리병으로 100% 재활용되지만 전체 유리병의 35%나 차지하는 혼색 유리병은 매립이나 소각 처리되는 실정이다. 유리병을 파쇄한 후 녹여서 새 유리병으로 만드는 방법 외에 새로운 재활용 방법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이에 한국환경공단이 폐유리병을 활용해 골재를 생산하는 기술 상용화 지원을 추진해 폐유리병 자원화에 성공했다.

한국환경공단이 폐유리병을 활용해
골재를 생산하는 기술 상용화 지원을 추진해
폐유리병 자원화에 성공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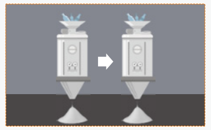
## 유리병 처리 방법

| | 처리 방법 | 비중 | 처리 결과 |
|---|---|---|---|
| **삼색병** (백·갈·녹색) | 파쇄 후, 녹여서 새로운 유리로 재활용 | 65% | (제병사로 반입된) 삼색병은 100% 새 유리병으로 재활용 |
| **혼색유리** (모양/색깔 상이, 깨진 병) | 매립이나 소각 처리 | 35% | 분해되는데 100만 년 이상 소요 |

## 폐유리병 활용 골재생산 기술 상용화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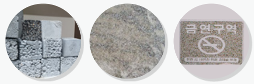
와인병, 화장품병, 깨진 유리 등

→



파쇄 후 추가 파쇄

→



(유리비드로 만든 벽돌, 인공 골재, 콘크리트 블록)
건축·토목 자재용 인공골재 생산

- 토목·건축용 골재 수요처 발굴 **총 10개소**
  아스콘 및 콘크리트 : 4개소 / 타일·기와·벽돌 : 2개소 / 블록 : 4개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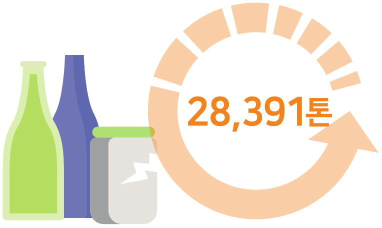


## 유리 골재 시장 형성을 위한 3대 장애요인 해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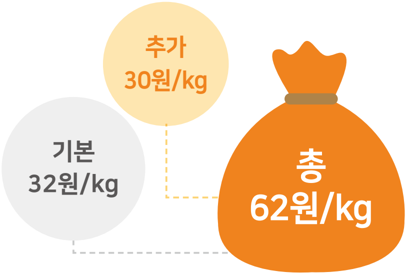
| | | | |
|---|---|---|---|
| 장애요인 → | 재활용 실적인정 기준 부재 | 낮은 수익성 | 품질 및 안정성 검증 |
| 문제해결 → | 실적인정 기준마련 → 지원금 32원/kg | ➕ 추가 인센티브 30원/kg | ➕ 환경표지 인증 획득 |
| | ↑ | ↑ | ↑ |
| | 한국환경공단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업무처리지침 개정 | 재활용 업체 수익성 개선을 위한 추가 지원금 마련 | 친환경 인증 및 품질 검증 |
| | 의견 수렴 이해관계자 간담회 | 인공골재의 낮은 시장가격 ➕ 투자 설비 비용 회수 어려움 | 친환경 인증마크 획득 (친환경 환경부) |
| | 현장조사 연구용역 기초 데이터 구축 | ↓ 토목·건축자재로 재활용 시 지원금 추가지급 | KS시험방법에 따른 품질 검증 |
| | 시스템 개선 실적관리 페이지 생성 | | |

## 혼색 유리병 재활용 실적

* 2021~2022.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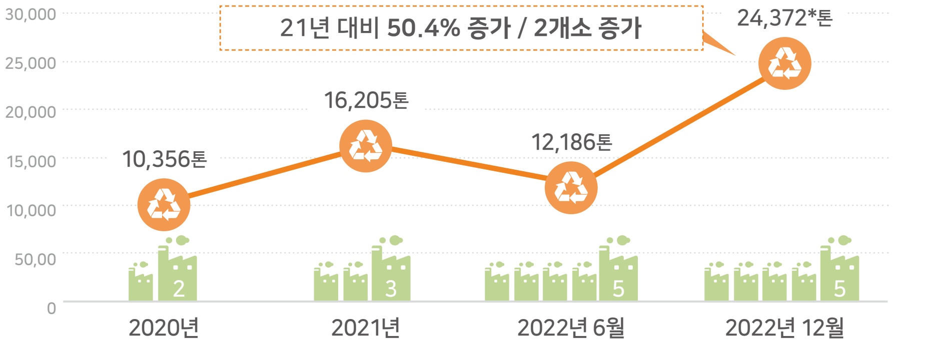



## 토목·건축자재용 재활용 지원금 추가 지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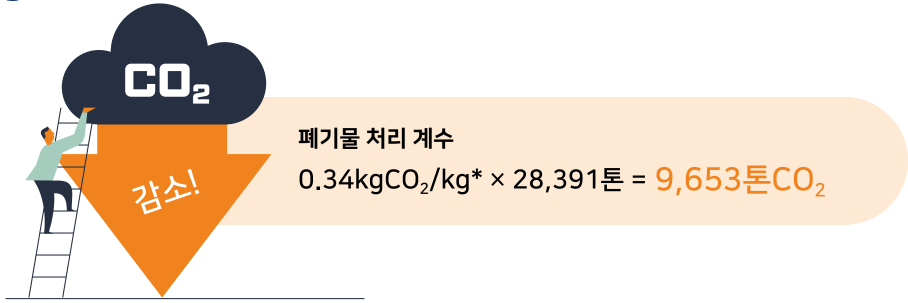



## 연도별 혼색 유리병 재활용 실적

* '22년 실적은 '22 년 6 월까지의 실적 기준 1년 단위 환산치




## 탄소배출 감축량








## 경제적 효과

- 매립·소각 등 폐기물 처리 대체 **약 40억원 절감**
- 기본지원금 및 추가 지원금 **약 18억원 확보**
- 혼색유리 건축·토목용 골재 **매출액 약 1억원**

| 구 분 | 금 액(천원) | 상세 내역 |
|---|---|---|
| 폐기물 처리비용 절감 | 3,974,740 | 유리병 처리비용 단가(140천원/톤)×재활용량 28,391톤 |
| 재활용지원금 | 1,760,242 | 골재용 재활용 지원금 62원/kg × 28,391톤 |
| 매출액 증가 | 141,955 | 유리골재 평균 매출단가 5원/kg × 28,391톤 |
| 합 계 | 5,876,937 | " 기업 경제적 혜택 59억원 " |

### 골칫덩이 깨진 유리, 활용할 수 있는 유리골재 상품 개발에 나서다

유리는 모두 재활용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실상 백색, 녹색, 갈색이 아니거나 깨진 유리병은 재활용이 어렵습니다. 한국환경공단은 이런 혼색 유리를 재활용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찾기 위해 중소 재활용업체와 협업으로 폐유리병을 활용한 골재 생산기술 상용화를 추진했습니다. 상생 협력 프로그램을 통해 수거된 유리병을 작은 입자로 분쇄하여 콘크리트블록과 같은 건축자재로 생산하는 기술을 검증하고, 토목·건축용 골재수요처 10개소를 발굴했습니다.

하지만 첫 번째 문제, 제도적 장애요인이 있었습니다. 기존에 없던 새로운 재활용 방법이었기 때문에 혼색 유리를 재활용하더라도 이를 실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기준이 없어 재활용업체들은 지원금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이에 공단은 업체 간담회, 현장조사, 연구용역 등을 통해 실적 조사 방법과 관리 방안이 담긴 업무처리 지침을 개정하고 재활용실적을 인정하여 kg당 32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낮은 수익성이었습니다. 유리병을 재활용한 인공골재는 토목·건축용 골

재시장 진입 초기 단계로 적정가격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재활용업체들이 골재 생산을 안정적으로 지속하기 어려웠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공단은 환경부, 유관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공동 운영위원회 의결을 통해 유리병을 골재로 재활용하는 경우, 추가로 kg당 30원의 지원금을 더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세 번째 어려움은 유리병 골재의 품질이나 안전성에 대한 우려였습니다. 이에 '환경표지 인증'과 KS 시험방법에 따른 성적서를 통해 품질과 안전성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며 천연골재의 대체재로서 공공과 민간영역 사용 확대를 도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장애요인을 극복하며 그동안 버려지던 2만 8천여 톤의 혼색 유리를 새롭게 재활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혼색 유리의 매립과 소각에 따른 탄소 배출 9,653톤을 절감하였고, 모래 등 천연골재를 대체하여 천연골재 채취로 인한 환경파괴를 줄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재활용업체는 혼색 유리 폐기물처리 비용 약 40억 원 절감, 재활용 지원금 18억 원, 매출액 증가 1억 원으로 모두 59억 원의 경제적 혜택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ESG 경영이 화두가 되고, 유리병 인공골재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제고되면 재활용업체의 수익과 유리병 재활용률은 점차 증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국환경공단은 앞으로도 인공골재의 수요처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유리병 재활용 산업을 활성화하여 적체 또는 폐기물로 처리되는 유리병의 양을 최소화하고 환경적·경제적 효과 극대화를 위해 앞장서 나갈 계획입니다.

**담당자 한마디**

**전 현 주** | 한국환경공단 포장재EPR 운영부

혼색 유리 재활용 활성화 간담회를 통해 그동안 버려던 것을 재활용할 수 있다니 제병사 외 다른 수요처가 생겨서 다행이라는 업체, 폐기물 처리비용 절감과 재활용 지원금 추가지급이 큰 도움이 되었다는 업체 등 여러 업체들로부터 유리병 업계에 꼭 필요한 사업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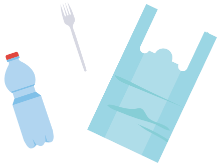
최우수상
공공 부문

# 바다 쓰레기가 돈이 되는 과자상점

##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적극적인 시민참여로 해변 쓰레기를 줄이다.

**03 한국관광공사**

해마다 해수욕장은 관광객의 쓰레기 무단 투기 문제로 골치를 앓고 있다. 쓰레기 수거를 위해 각 지자체는 적지 않은 인력과 예산 낭비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었다. 한국관광공사는 환경재단과 함께 환경을 보호하고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해 바다 쓰레기를 주워오면 바다 관련 과자를 주는 과자상점 '씨낵(SEANACK)' 캠페인을 전개해 바다 쓰레기는 획기적으로 줄이고 관광객에는 재미와 보람을 안겨주고 있다. 단순히 쓰레기를 줍는 플로깅 캠페인을 넘어 신선하고 기발한 아이디어로 화제를 모으고 있는 과자상점 '씨낵(SEANACK)' 현장을 다녀왔다.



매년 해수욕장 관광객들의 쓰레기 무단 투기가
해양 환경파괴의 주범으로 떠오른 가운데
쓰레기 수거에 인력과 예산이 낭비되고 있습니다

## 바다 쓰레기를 가져오면 바다 과자로 되돌려드립니다!

매년 해수욕장 관광객들의 쓰레기 무단 투기가 해양 환경파괴의 주범으로 떠오른 가운데 쓰레기 수거에 인력과 예산이 낭비되고 있습니다. 특히 각 지자체에서는 여름 휴가철 해수욕장에 버려지는 쓰레기를 수거하기 위해 많게는 수십 명을 동원되고 있으며, 쓰레기봉투 구입으로 많은 예산이 낭비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쓰레기 무단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중요하며 지속적인 참여 확대가 필요합니다. 기존 플로깅 캠페인은 단순히 쓰레기를 줍는 것으로 진부한 측면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한국관광공사는 고심 끝에 새롭고 기발한 아이디어를 접목한 캠페인 전개에 나섰습니다. 바로 과자상점 '씨낵(SEANACK)'입니다. '씨낵(SEANACK)'은 바다(SEA)와 과자(SNACK)의 합성어로 바다 쓰레기를 수거하고 고래밥, 자갈치 등의 바다 관련 과자를 리워드로 제공받는 대국민 비치코밍 캠페인입니다.

씨낵(SEANACK) 캠페인은 '바다 쓰레기가 돈이 되는 과자상점'이라는 타이틀로, 해수욕장을 방문하는 관광객을 주타깃으로 설정하였습니다. 먼저 캠페인을 추진하기 위한 예산 마련이 시급하였습니다. 공사 내 전 부서가 차량비, 인쇄비 등 탄소 유발 관련 예산을 10%씩 자체적으로 절감하여 캠페인 비용을 충당하였습니다.





## 관광객에게 또 다른 즐거움과 보람을, 자연도 살리고 재미도 챙겨요!

씨낵(SEANACK) 캠페인을 널리 알리기 위해 민간기업도 동참해 주었습니다. 제일기획에서 캠페인 홍보영상을 제작하였으며, SK브로드밴드에서는 동 홍보영상을 활용하여 전국 1,300개 올리브영 매장 내 디스플레이 광고 및 강원도 Btv 시청자를 대상으로 송출하는 등 전 국민을 대상으로 홍보를 전개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같은 대대적인 홍보에 힘입어 2천 명 이상의 국민이 캠페인에 참가하여 약 700kg의 쓰레기를 수거하는 데 뜻을 같이하였습니다.

물론 캠페인을 전개하기까지 여러 가지 난항을 겪기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장소 섭외에 대한 어려움이었습니다. 지자체들은 해수욕장이 개장되는 성수기 시즌에 해수욕장 내 민간에서 주최하는 각종 행사와 이벤트 개최가 어렵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이미 행정력을 투입하여 매일 쓰레기를 치우고 있는 상황으로 별도 행사의 필요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주변 상인과의 마찰과 일부 관광객의 민원 발생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았습니다. 행사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에 어려움이 발생하기도 했지만 지자체를 적극적으로 설득해나갔습니다. 관광객 스스로 쓰레기를 수거함으로써 지자체에서 쓰레

기 수거를 위해 투여하는 인력과 예산 낭비를 방지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점, 또한 캠페인은 단순 회사 홍보나 사익 목적이 아닌 공익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 깨끗한 해수욕장을 조성하고 친환경 여행의 인식 개선에 목적이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이 같은 설득 끝에 드디어 각 지자체의 장소협조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동 캠페인에는 가족 단위 관광객과 MZ세대 중심으로 총 2,021명이 깨끗한 해수욕장 만들기에 동참하였으며, 경포해수욕장 기준 캠페인 이후 쓰레기 수거량이 30% 감소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해수욕장을 찾은 한 관광객은 “자연을 살리고 재미도 챙기는 1석 2조의 캠페인입니다.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했으면 좋겠어요!”라는 소감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씨낵(SEANACK) 캠페인을 통해 해수욕장이 친환경 관광지로 거듭나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획기적인 발상과 빛나는 아이디어, 그리고 발 빠른 적극행정이 가져온 큰 열매입니다.

**담당자 한마디**

**박 종 선** | 한국관광공사 ESG경영팀

바다쓰레기가 돈이 되는 과자상점 ‘씨낵(SEANACK)’ 캠페인을 실시한 이후 해수욕장에 불법 투기되는 쓰레기가 30%나 감소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인력과 예산 낭비를 막고 친환경 관광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한 관계자들과 캠페인에 참여한 관광객들에게 고마움을 전합니다.





최우수상
지자체 부문

# 버릴 흙, 쓰는 흙으로 바꿔
# 적극적으로 예산 절감에 앞서다.

04 전북 임실군

임실군청은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사토에 대하여 공익사업 산업단지 심의 단계부터 성토재와 사토량에 대한 수요를 예측하여 설계에 반영하고 공익사업 현장에 제공하는 ‘임실 오수제2농공단지 조성사업’을 시행했다. 이 같은 사업을 통해 임실군 19개 사업장에 16만㎥의 사토를 제공함은 물론 토취장 확보를 위한 인허가가 불필요하게 되었고, 19개 사업장의 공사 기간을 단축하는 성과를 얻었으며 무엇보다 사업장에 양질의 토사 공급에 기여하고 있다.

**2018. 8. 1.**
민선7기 군수공약사업 확정

**2019. 6. 26.**
오수제2농공단지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착수

**2020. 7. 29.**
농공단지계획 및 환경영향평가 합동설명회

**2021. 3. 23.**
지방산업단지계획 심의위원회 심의

**2021. 5. 12.**
오수제2농공단지조성사업 원가심사
- 총 성토재 184,252㎥
(반출계획 166,047㎥ 사토 18,205㎥)

**2021. 6. 4.**
오수제2농공단지 사토(공익사업 성토재)
처리계획 보고

**2022. 8. 12.**
언론보도: "임실군, 일하는 방식 바꾸더니
예산절감에 효율성까지"
(신문보도 12)

**2022. 8. 11.**
언론보도: "임실군, 버릴 게 없다...버릴 흙→
쓰는 흙으로 바꿔 예산절감"
(NEWSIS)

**2022. 6.~**
임실군 19개 사업장에 16만㎥ 사토(성토재) 제공

**2022. 4. 29.**
토사 반출 상습적 민원 발생

**2022. 4. 22.**
오수면 지역발전협의회 긴급이사회 소집(동향보고)

**2021. 10. 25.**
임실군 공익사업 수요조사 결과 19개 사업장
제공 희망

**2021. 6. 28.**
공사 착공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사토를 공익사업에 성토재로 제공하여 버리는 흙을 쓰는 흙으로 사용함으로써 예산절감을 도모하고 공사기간을 단축하고자 한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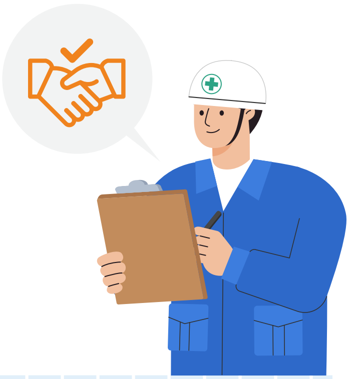
## 토취장 확보 문제해결,
## 양질의 토사 공급과 공사기간 단축까지!

건설공사 시 나오는 사토는 일반적으로 운반거리 5km 기준으로 굴삭기와 덤프트럭 사용 장비대금을 조합하여 공사비를 산정합니다. 현장에서는 아무 곳에나 흙을 버릴 수가 없을 뿐 아니라 사토장의 경우도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때 설계비용과 공사비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임실군에서는 지방산업단지계획 심의 단계부터 공익사업 성토재에 대한 수요를 예측·반영하여 심사를 받았습니다.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사토를 공익사업에 성토재로 제공하여 버리는 흙을 쓰는 흙으로 사용함으로써 예산절감을 도모하고 공사기간을 단축하고자 한 것입니다.

2018년 반려동물관련 지역특화단지 및 일반농공단지 조성 사업이 민선7기 군수공약사업으로 확정됨에 따라 실시설계용역에 착수하였습니다. 또한 농공단지계획 및 영향평가 합동설명회와 지방산업단지계획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원가심사 후 공사에 착공하였습니다. 임실군 공익사업 수요조사 결과 19개 사업장이 사토 제공을 희망한 것으로 나타났고 이에 총 16만㎥의 사토를 제공하였습니다. 하지만 사업추진이 원활히 이루어진 것만은 아닙니다. 이 과정에서 임실군중기연합회의 관내 장비사용을 요구하는 집회 신고가 접수되었고, 토사반출 반대 민원이 발생하는 상황에 맞닥뜨리기도 했습니다. 민원인은 오수지역 장비 소유자들로 본인들의 장비를 전적으로 사용할 것을 일방적으로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임실군중기연합회 집회 신고 문제에 대해서는 군수와의 대화를 통해 중기연합회의 의견을 들어 관내 사업장에 관내 장비사용을 권고하였고, 오수지역 토사 외부 반출 문제에 대해서는 민원인과 오수면, 임실군 3자 간 소통을 통해 민원인들을 적극적으로 이해시켰습니다.

임실군은 이같이 여러 난제들을 해결하여 사업장에 사토를 제공함으로써 15억 원 1,400만 원의 예산을 절감했고, 19개 사업장에 총 16만 3천㎥에 달하는 양질의 토사를 공급하는 성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또한 기존에는 공익사업 순성토 공사 시 토취장을 확보해야 하며, 이를 위해 인허가를 받아야 했지만 성토재 제공으로 토취장 확보를 위한 인허가 절차와 토취장 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공익사업 성토제 제공으로 양질의 순성토 확보를 위한 기간이 단축됨에 따라 공익사업의 공사기간 또한 단축되는 성과도 얻게 되었습니다. 임실군의 이같은 적극행정으로 공익사업에서 발생하는 사토의 공익적 사용방법에 대한 모델을 제공하는 계기를 마련한 것입니다.



**담당자 한마디**

**정 일 범** | 전북 임실군청 경제교통과

성토재 활용의 성과를 인정받아 인터넷으로 추천까지 받게 되니 더욱 보람으로 다가옵니다. 버릴 흙을 쓰는 흙으로 바꿔 예산을 절감한 이 같은 사례가 다른 시청과 군청에도 적용된다면 예산도 절감되고, 절감된 예산은 지역민이 필요로 하는 또 다른 공익사업을 할 수 있어 1석 2조의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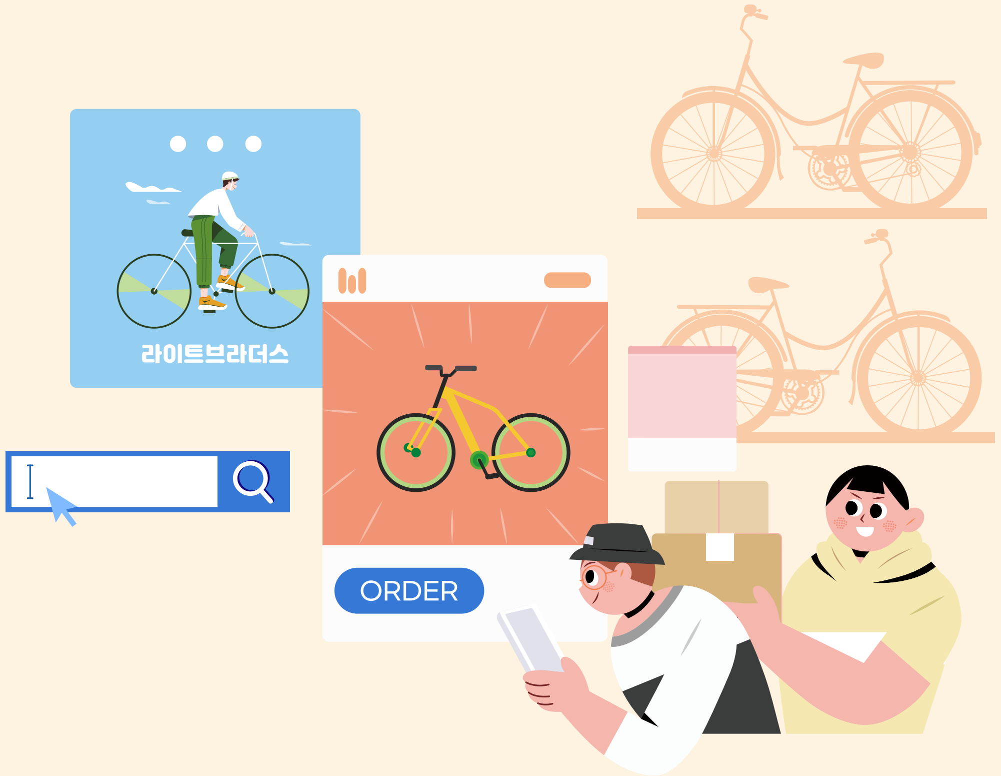




우수상
중앙 부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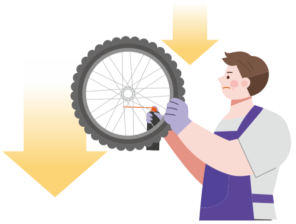
# 재생자전거 온라인 판매, 적극적인 지원으로 도시미관도 개선·탄소배출 저감에 기여!!

**05** 서울특별시



서울시에서는 매년 1.5만 대 이상의 방치자전거가 발생합니다. 방치자전거는 구청에서 수거한 후 고철로 처리되고 있으며, 이는 큰 자원 낭비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치구는 수거 용역을 통해 자활센터에 방치자전거를 전달하며, 자활센터에서는 방치자전거를 수리해 재생자전거로 생산하는 자활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월평균 판매량은 10대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자활근로자들은 재생자전거를 생산해도
판매하지 못해 근로의욕 저하는 물론
사업이 축소되는 상황에 이르고 있었습니다.



서울시는 재생자전거의 원활한 판매를 지원하고자 재생자전거 온라인 판매체계를 구축해 자활근로자의 수입을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그리고 2022년 1월, 자전거 중고거래 플랫폼인 '라이트브라더스'와 지역자활센터와의 협업체계를 구축해 온라인 시범판매를 개시했습니다. 당초 시범판매 지역은 광진구와 영등포구 2개 구에 불과했지만 시범판매 3개월 만에 10개 구로 확대되었습니다. 시중가 100만 원대 자전거를 12만 원에 판매해 시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게 된 것입니다.

### 재생자전거 판매를 위한 재원 확보,<br>기증 추진에 판매장까지 마련하다

서울시는 2022년 7월부터 티머니복지재단에 사업을 제안해 1,000대 생산을 위한 8천만 원의 재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층에 900대, 보호아동에 100대를 기증하기 위해 수요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이에 사회복지협의회와 아동복지협회와의 협업으로 취약계층에 500대 이상의 재생자전거를 전달하는 등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생자전거의 판매 활성화로 라이트브라더스의 기존 인력만으로는 관리가 어려워 일자리사업과 연계하여 재생자전거MD 2명을 채용하기도 했습니다. 선발된 뉴딜일자리 사업 참여자 2명은 재고관리, 온라인 판매 노하우 등 현장기술을 익혀 향후 취·창업에 활용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2022년 9월에는 재생자전거 판매장을 조성하여 시민들의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재생자전거 온라인 판매 사업 추진 시 방치자전거 사업에 대한 자치구와 기업의 낮은 관심, 기존에 없던 사업방식에 부담감, 또한 낮은 수익성으로 인한 자활센터의 재생자전거 사업 축소 등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멈출 수 없었습니다.

고민 끝에 라이트브라더스 관계자와 함께 재생자전거 보관소를 방문하여 재생자전거의 상품성을 확인시키며 온라인 판매에 참여할 것을 설득하였습니다. 또한 광진구와 영등포구 자활센터 실무진을 만나 직접 시범판매 참여를 설득하는 등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인 끝에 온라인 판매 사업에 첫발을 내딛게 되었습니다.

### 시범판매 3개월 만에 판매지역 10개구로 확대!<br>타 지자체도 참여할 수 있는 체계 마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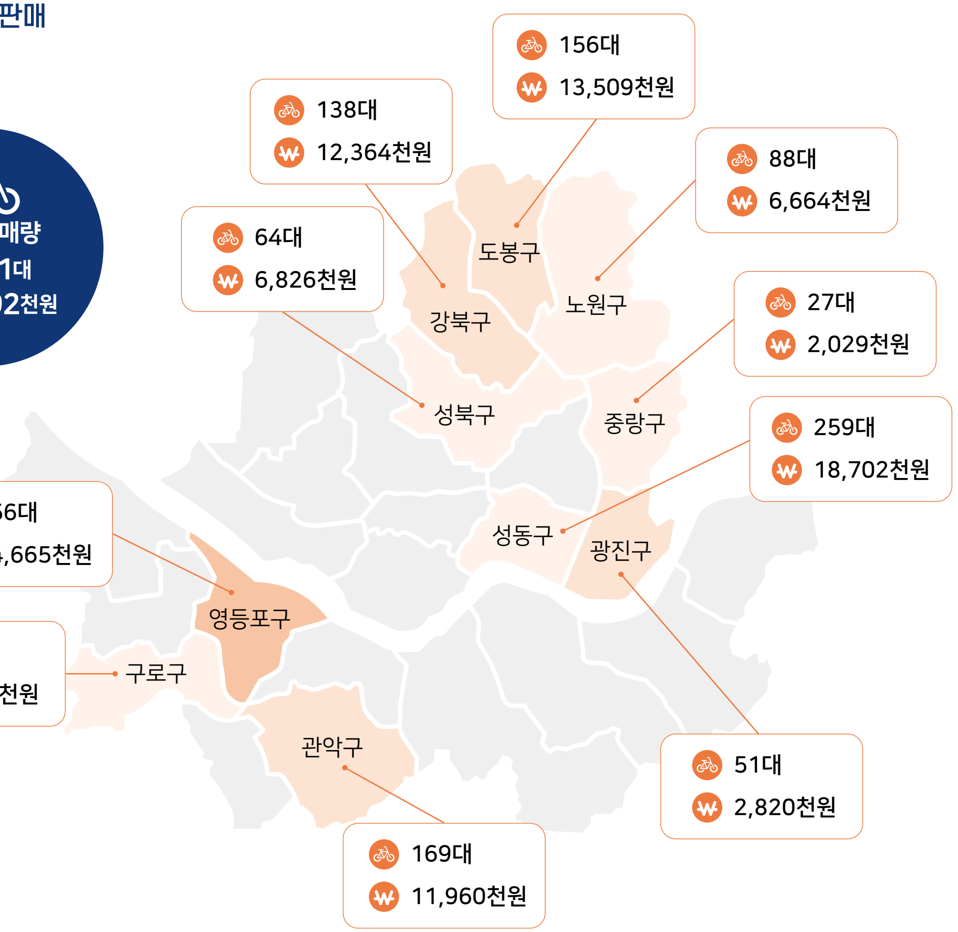
재생자전거 온라인 판매 사업은 순식간에 상승 가도를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재생자전거 시범판매 2개월간 15백만 원의 매출이 발생한 것입니다. 서울시가 이 같은 결과를 보도자료로 제작해 배포한 후에는 판매지역이 2개구에서 10개 구로 확대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어 8월 말까지 104백만 원의 매출이 발생함에 따라 보도자료를 추가로 제작해 배포했습니다. 이는 롯데마트의 팝업매장 조성 결정 단초가 되기도 했습니다.

자활센터는 2022년 1월 시범판매 후 2022년 8월 말까지 총 1,271대를 판매해 104백만 원의 수입을 확보하였습니다. 이러한 판매수입은 복지부가 관리하는 자활기금 조성과 지역 자활사업비, 자활근로자 성과금 지급등에 활용될 예정입니다.

서울시는 재생자전거 온라인 판매를 기획하는 단계에서 온라인 판매가 타 지역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라이트브라더스와 확장성을 고려해 개발하였습니다. 이에 온라인 판매에 참여하고자 하는 지자체는 지역에 관계없이 어디에서나 추가 참여가 가능합니다. 자칫 골칫덩어리로 전락할 뻔한 재생자전거가 온라인 판매 사업을 통해 큰 인기를 누리는 국민의 교통수단이 된 것은 끊임없는 설득과 속도를 늦추지 않은 추진력 덕분이었습니다.

### 재생자전거 판매

**전체 판매량**
**1,271대**
**103,792천원**




**담당자 한마디**

**이 영 민** | 서울특별시 보행자전거과

재생자전거 온라인 시범판매 후 영등포지역자활센터에서 근무하는 분께서 지난해와 비교해서 올해는 큰 변화를 느낀다며 판매가 잘 되지 않아 창고에 가득했던 재생자전거가 지금은 모두 판매되어 창고가 텅 비어 있다고 말씀하실 때 느낀 보람과 감동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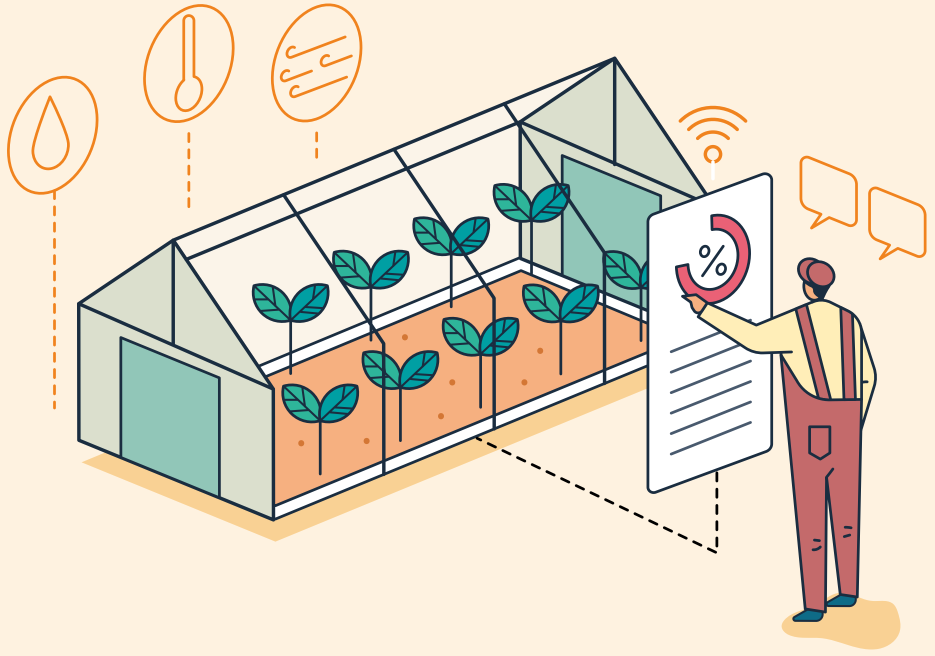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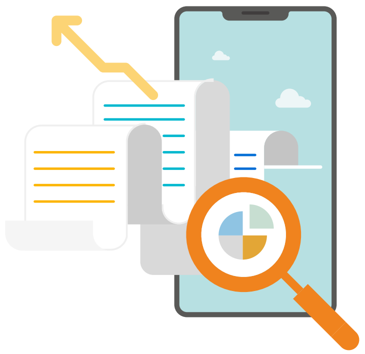
우수상
공공 부문

# 버려지는 열로 온실을 따뜻하게!
## 적극행정으로 농민의 마음도 따뜻하게!

**06** 농림축산식품부



우리나라 시설재배는
가온면적의 81.3%에 유류를 사용하고 있어
유류의존도가 매우 높고 난방비 비중이
경영비의 20~30%로 농가 부담이 매우 큰 상황입니다.



우리나라 시설재배는 가온면적의 81.3%에 유류를 사용하고 있어 유류의존도가 매우 높고 난방비 비중이 경영비의 20~30%로 농가 부담이 매우 큰 상황입니다. 이같이 유가 급등 등 외부환경에 매우 취약하고 온실가스 배출이 많은 화석에너지 중심의 시설채소 생산체계를 신재생에너지로 전환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었습니다.

이에 농식품부는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을 이용하여 폐열 등 미활용 에너지를 온실 난방에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필수적인 에너지 공급원, 수요처의 정보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기존 통계자료로는 현황 파악이 불가능하고 부처 간 정보 공유가 미흡한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개별 농업인이 온실 인근의 발전소, 공장 등과 협의하여 사업대상지를 발굴해 정부지원사업을 신청하고 지원받는 방식으로 2010년부터 2020년까지 10년간 6농가가 지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별도의 예산 확보로 통계조사부터 팜맵서비스 구축까지

농식품부는 시설원예 분야 에너지 이용구조의 면밀한 검토에 기반한 에너지 이용 합리화 정책 마련을 위해 별도의 예산을 확보하여 통계조사에 착수하였습니다. 그리고 농업경영체등록정보에 온실을 등록한 207,190농가를 대상으로 온실현황, 에너지 이용현황 등 36개 항목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이를 통해 기존 통계조사로는 확인할 수 없었던 농가 단위 온실 종류·면적, 피복재, 재배방식, 난방기, 난방연료·사용량 등 상세정보 DB를 구축했습니다. 또한 산업부 등 관계부처와의 협업으로 난방 수요처와 공급처 간에 연계가 가능한 농식품 팜맵 서비스(agis.epis.or.kr)를 구축하였습니다. 농식품부는 산업부에 난방온실 현황 정보를 제공하고 국가열지도(k-heatmap.com)에 반영하였으며, 산업부는 농식품부에 미활용에너지 발생시설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정보는 농식품팜맵(agis.epis.or.kr)에 반영하였습니다.

2022년 4월, 미활용에너지 발생시설 중 농식품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가축분뇨공동자원화시설 정보를 활용하여 인근 시설원예 농가 중 유류난방을 하고 있는 농가를 발굴, 발전 폐열을 난방온실에 공급하였습니다. 이러한 각고의 노력 끝에 농업 분야 재생에너지순환모델을 구축하는 성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각고의 노력 끝에 농업 분야
재생에너지순환모델을 구축하는
성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산업부에서 제공한 미활용에너지 발생시설 정보를 토대로 한국지역난방공사와 난방회수열의 온실난방 이용방안에 대한 협의를 추진하였으나 사업 가능 지역이 도시 인근으로 국한되고 사업비를 비롯해 열공급단가 문제 등으로 검토가 중단되는 상황을 겪기도 했습니다. 기존 신재생에너지시설과 비교해 사업성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얻은 것입니다. 하지만 농식품부는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 새로운 도전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 실패 뒤 새로운 도전, 난방비 절감과 온실가스 감축에 성공하다

농식품부는 한국수자원공사와 수열에너지 공급방안에 대한 협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천수를 이용하는 수열에너지는 상수원 보호구역 개발 제한 등 행정상 제약으로 실행에 많은 어려움이 있으나 이용가능한 지역을 지속 발굴하고 있습니다. 경북 상주시 스마트팜 혁신밸리는 환경부 시범사업으로 스마트팜에 수열에너지 공급 시설 설치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 동서발전, 두산퓨얼셀 등의 발전사업자와는 수소연료전지발전소와 스마트팜 연계 방안을 협의 중입니다. 또한 한국전력, 동서발전, ㈜대상 등과 함께 농업인 신재생에너지시설 설치 지원 등 기업과 농업인의 상생협력도 적극 추진 중입니다.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을 통해 개인별·품목별·에너지원별 난방 현황 등 상세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되었으며 에너지 공급원과 수요처의 통합관리를 비롯해 미활용에너지가 공급 가능한 온실을 어렵지 않게 발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미활용에너지를 공급 가능한 시설과 연계하여 신규 온실단지 입지를 선정할 수 있게 되었고 폐열 등 미활용 에너지를 온실난방에 이용할 경우 유류대비 난방 비용 89% 절감, 온실가스 525톤/ha을 감축할 수 있습니다.

그간 충남 청양군에 위치한 칠성에너지(가축분뇨공동자원화시설)은 연간 5만 7천톤의 가축분뇨 처리를 통해 연 2,170가구(4인 기준)가 사용할 수 있는 전기를 생산하고 전기생산 시 발생한 폐열을 대부분 버리고 있었습니다. 농식품부는 2022년 4월 청양군, 한국농어촌공사, 축산환경관리원과 함께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통해 인근 토마토 재배 농가에 발전폐열 공급을 결정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연간 5천만 원의 난방비 절감으로 농민들의 부담을 더는 데 기여했으며, 화석연료 대체로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멜론 등 고온작물 재배로 수익을 향상하는 등 1석 3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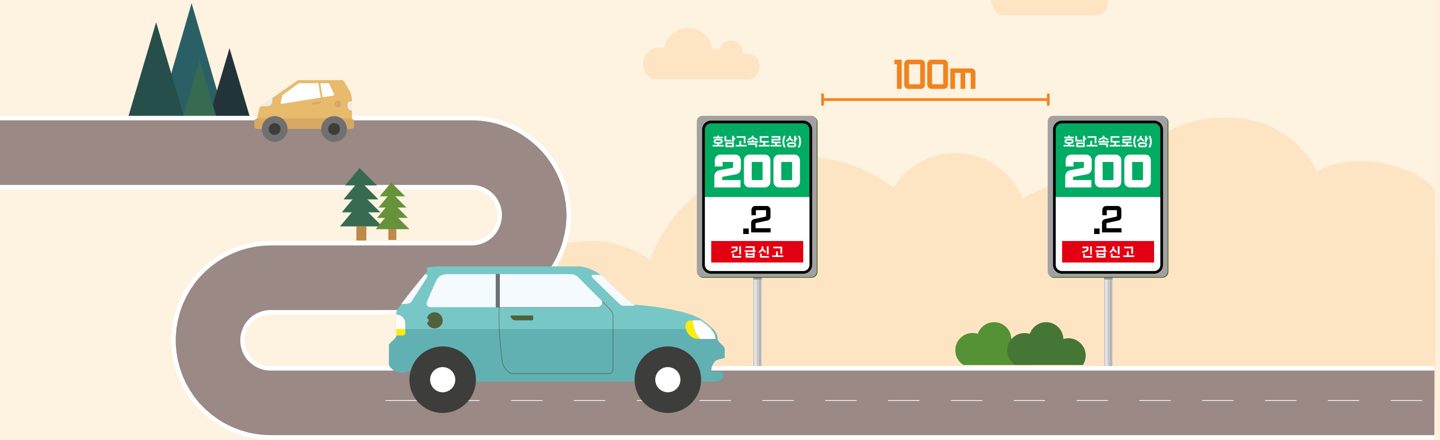
**담당자 한마디**

**최 은 철** | 농림축산식품부 원예경영과

토마토재배농가는 그간 생산비의 50%를 차지하는 겨울철 난방비가 부담되어 작물 생육에 필요한 최소 난방온도로 운영해왔는데 발전폐열을 이용하며 작물 생산에 적합한 온도를 유지해 생산성도 높아지고 난방비도 절감되었다며 흡족해했습니다. 농민의 마음이 더욱 따뜻할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우수상
공공 부문

# 고속도로 이정표 100미터 단위 설치와 119 위치표기 접수 시스템 구축으로 신속한 출동 실현




**07** 전라북도

고속도로에는 이정표가 200미터 단위로 설치되어 있어 사고 발생 시 신고자가 위치를 파악하기 어려우며, 119신고접수 시스템에는 고속도로 이정표가 반영되어 있지 않아 고속도로 현황표로 사고지점을 확인해야 한다. 이에 전라북도가 고속도로 이정표 설치 기준 개선과 119신고접수 시스템에 고속도로 이정표 위치 반영을 요청함으로써 2022년 7월 1일부터 119신고 접수 시스템에 고속도로 이정표가 100미터 단위로 표기되어 신고에 신속히 대비할 수 있게 됐다.

### 고속도로 이정표 설치 기준 개선으로 사고 위치 파악을 쉽게!

고속도로에는 이정표가 200미터 단위로 설치되어 있어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신고자가 사고 위치를 파악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특히 야간이나 우천 시, 곡선 지형에서는 더더욱 확인이 어렵기 마련입니다. 또한 119신고접수 시스템에는 고속도로 이정표가 반영되어 있지 않아 수기로 작성된 고속도로 현황표로 사고지점을 확인하고 출동을 조치하게 되는데 이때 출동이 지연되어 신속한 구조, 수습이 어려운 점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 119종합상황실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더욱 신속하게 지키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먼저 한국도로공사의 도로안내 표지판 등 시설물 설치에 대해 업무 협조를 요청하였습니다. 그리고 국토교통부 도로국 도로정책과에 현행 왕복 6차선 이상 100미터 단위의 이정표 설치기준을 왕복 4차선 100미터 단위로 이정표를 설치할 수 있도록 기준 개선을 요청하였습니다.

한국도로공사 전북본부와는 현행 이정표 설치에 대한 문제점과 이정표 설치 기준 개선에 대한 당위성 등에 대해 적극 설명하고 2023년도 설치 예산에 반영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이같이 관련기관과의 협의와 협조 등을 통해 드디어 2022년 7월 1일부터 119긴급구조표준시스템 지리정보시스템에 고속도로 이정표가 100미터 단위로 표기됨으로써 119신고접수의 신속한 처리가 가능해졌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즉시 빛을 발했습니다. 2022년 8월 23일 17시 2분 호남고속도로 상행선 181km 지점에서 차량이 전복되는 사고 발생 시 긴급구조시스템 이정표 표기로 신속하게 사고 위치를 확인하여 인명을 구조함으로써 사고자를 병원으로 신속하고 안전하게 이송할 수 있었습니다.

**담당자 한마디**

**유 성 일** | 전라북도 119종합상황실

2022년 8월, 호남고속도로 상행선 181km 지점에서 차량이 전복되었다는 119 신고 접수 시 긴급구조시스템 이정표 표기로 신속한 사고 위치를 확인할 수 있었고, 인명을 구조하여 사고자를 병원으로 안전하게 이송할 수 있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적극행정의 힘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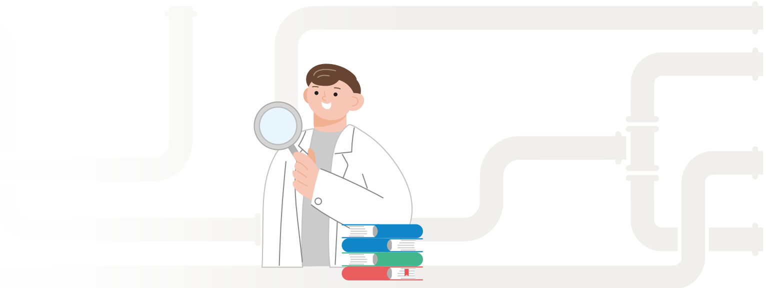
★★★ 우수상
지방공사·공단

#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대기배출가스 저감! 소각시설 세척 장치 특허 개발

08 창녕군 시설관리공단

대기배출가스 저감설비 중 액상소석회 분사설비의 공급펌프와 공급배관 내부에 소석회 고착현상이 발생하면서 분무량이 저하되고 배출가스가 과다 발생하는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같이 막힘현상이 나타날 경우에는 배관 전체를 교체해야 합니다. 이에 창녕군 시설관리공단은 액상소석회 공급펌프와 배관 세척장치 개발에 착수하였습니다. 펌프와 배관을 동시에 세척하기 위해 사무실이 아닌 현장에서 직접 테스트를 하였고, 세척에는 식염으로 사용되는 구연산을 사용함으로써 작업공간의 안전성과 친환경성을 확보했습니다. 이같이 연구 개발에 몰두한 결과 액상소석회 공급펌프와 배관 세척장치를 개발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분해 정비 횟수 '제로'를 달성함으로써 인력 운영에 대한 효율성을 높이는 데도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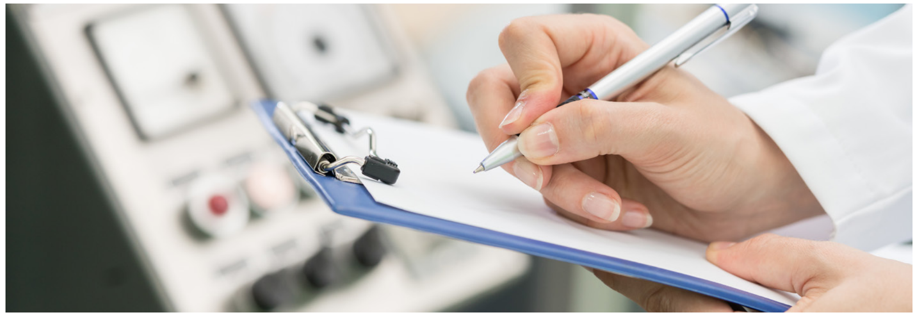
### 공단 최초 세척장치 개발로 인력과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이다

기존에는 액상소석회 공급펌프와 배관 세척 시 2~3명이 약 3시간가량 수작업으로 작업을 해야 했으나 창녕군 시설관리공단이 개발한 세척장치를 사용할 경우 1명이 약 10분가량 세척장치의 부품 결합과 펌프만을 가동하는 방법으로 손쉽게 세척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22년 8월을 기준으로 1년가량 세척장치를 운영한 결과 약품 공급안정성 확보를 비롯해 고장 또한 없어 분해 정비 횟수 '제로'를 달성함으로써 인력 운영에 대한 효율성을 높이는 데도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창녕군 시설관리공단은 세척장치에 대한 특허 출원에 나섰습니다. 특허출원 방법과 출원 진행절차 등에 있어 참고자료가 부족해 최종등록까지 수차례의 도면을 수정하는 등 제작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특허출원 관







련 자문을 비롯해 액상소석회 펌프와 배관 세척기 매뉴얼을 수립함으로써 특허출원 관련 간이 업무보고를 진행하고 신기술 연구개발 자문위원회 회의를 개최하는 등 다방면에서 지속적으로 노력하였습니다.

특허출원에 대한 세부계획 보고를 거쳐 특허출원을 추진한 결과 2021년 5월 25일, 세척장치에 대한 특허 등록에 성공했고 2021년 6월 1일부터 2022년 2월 28일까지 시운전을 시행해 2022년 2월 28일, 드디어 기술이 적용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세척장치의 개발로 공단 최초 특허등록이라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이는 타 공사와 공단에 우수사례로 공유되고 있습니다. 이같이 공단 내 신기술 연구개발은 첫 사례로 창녕군 시설관리공단은 자긍심을, 타 공단 등의 기관에는 적극행정의 모범사례로 꼽히고 있습니다.

**담당자 한마디**

**정 강 호** | 창녕군 시설관리공단 자원순환팀

세척장치 개발이 공단 내 신기술 연구개발을 통한 첫 번째 사례로 선정되면서 주위 직원들로부터 본인도 도전하고 싶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되었습니다. 세척기 개발은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도모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배관 교체비 절감 등 예산 절감에도 기여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기쁨과 보람이 배가 됩니다.

2023년

**적극행정 우수사례집**

CHAPTER II

# 어려움을 극복하고


01 중앙 부문 | **고용노동부**
- 어려움에 빠진 임금체불근로자를 더 넓고, 빠르게 보호

02 지자체 부문 | **경기 고양시**
- 제도적 허들을 넘어, 건설 중인 건축물 내 현장사무소 설치 문제 해결

03 중앙 부문 | **경찰청**
- DNA 감정 수요 폭증 · 부족한 인프라, 「신속 DNA 분석기」 개발로 극복

04 중앙 부문 | **외교부**
- 우크라이나 전쟁 중 미사일과 시가전을 뚫고 우리 교민들의 안전한 출국을 지원하다.

05 지자체 부문 | **전남 강진군**
- 지지방 소멸의 위기, 청년에게서 답을 찾다!

06 중앙 부문 | **식품의약품안전처**
- 수산물의 안전을 지키는 신속 검사 키트로 부정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다.

07 공공 부문 | **한국소비자원**
- 사각지대에 있는 숨은 피해 소비자까지 구제하라!

★★★ 대 상
중앙 부문

# 어려움에 빠진 임금체불근로자를
# 더 넓고, 빠르게 보호

**01** 고용노동부

정부에서는 1998년부터 임금체불 근로자의 생계보장을 위해 국가가 체불임금을 먼저 지급한 후 사업주로부터 구상하는 대지급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매년 발생하는 임금체불은 1조 원 이상이며, 코로나19의 장기화까지 경제사정이 악화되고 있어 체불근로자에 대한 신속한 권리구제가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임금체불 근로자를 신속하고 더욱 적극적으로 보호하고자 대지급금에 대한 절차를 대폭 간소화함으로써 체불근로자의 생활안정 도모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 연간 임금체불액

### 예산 마련 소요 기간

**고용부**
7천만 원,
3개월 소요

**근로복지공단**
4억 원,
7개월 소요

### 대지급금 신속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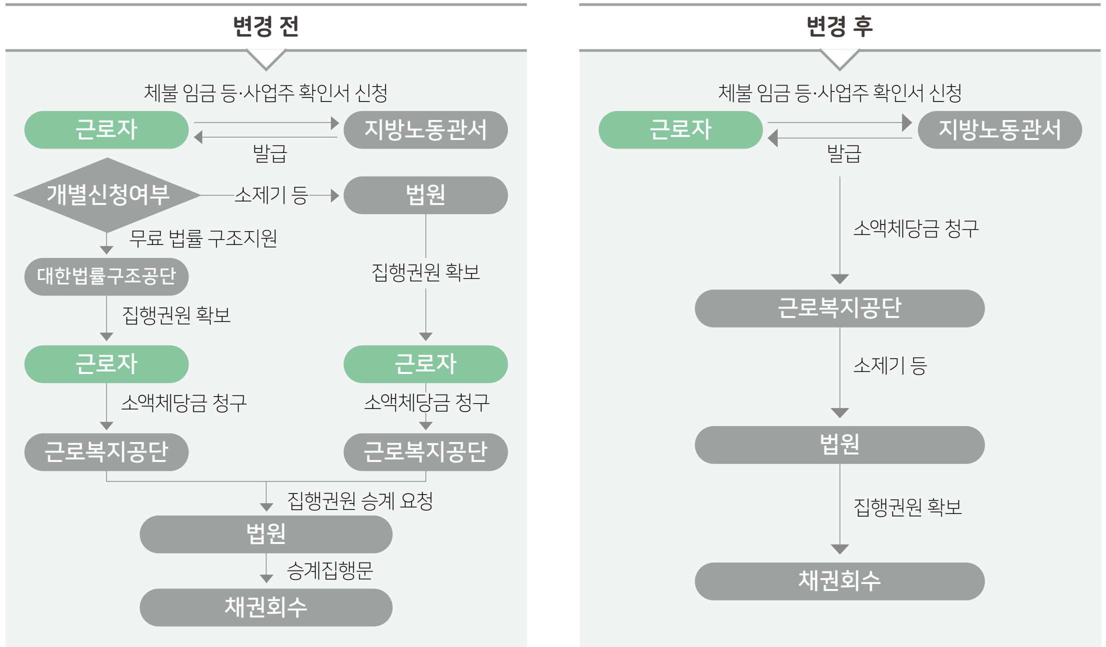
단축률: 56.7%

**변경 전** 평균 10개월 이상 (313일) 소요

**변경 후** 평균 4.5개월 (155일) 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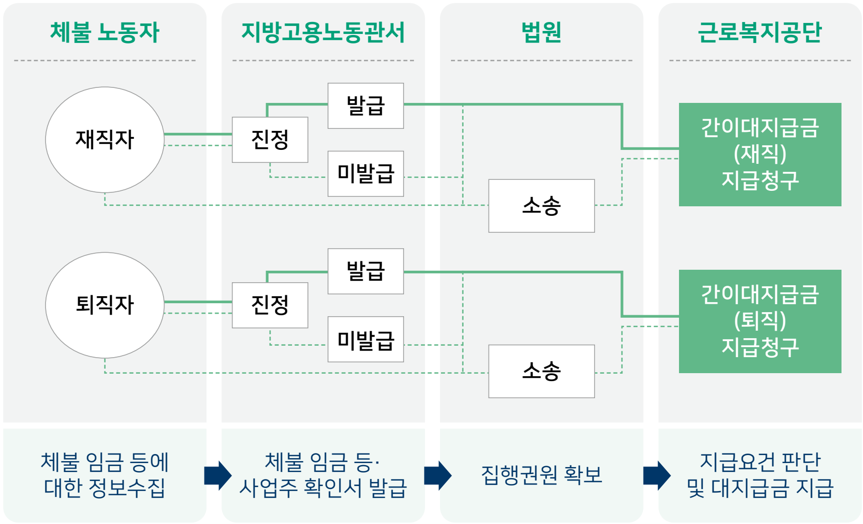
### 지원 과정

2021년 1월~2022년 8월 26,832개소 167천 명에 8,056억 원 지원
→ 이 중 9,693개소 66천 명(3,266억 원)이 대선 제도를 통해 신속 지원을 받음



## 재직자 보호 강화

**간이대지급금 지원 과정**




지급사업장 **152개소**

지급인원 **896명**

지급금액 **3,404백만 원**

* 통계: '21.10.14.~'22.8.31.

### 간이대지급금 지급 간소화는 물론 재직근로자도 지급 가능하도록 개선하다

매년 30여 만 명의 근로자가 1조 3천여 억 원의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으로 체불 문제는 여전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1998년부터 시행된 대지급금 제도는 임금체불을 청산하는 데 큰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만 간이대지급금 제도는 요건이 엄격하고 절차가 복잡하여 신청에서 지급까지 7개월 이상 소요되는 실정입니다. 이같이 긴 소요 기간으로 당장 생계에 쫓기는 근로자는 간이대지급금 신청을 포기하고 실제 체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사업주와 합의하는 경우도 상당수에 달합니다. 또한 재직 중 임금이 체불되어도 재직자는 간이대지급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어 체불 발생시점과 간이대지급금 지급 시점 간 격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체불근로자는 물론 재직근로자의 생계 또한 안정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체불임금을 더 빠르고 쉽게 지급 받을 수 있도록 체불청산 제도 보완에 나섰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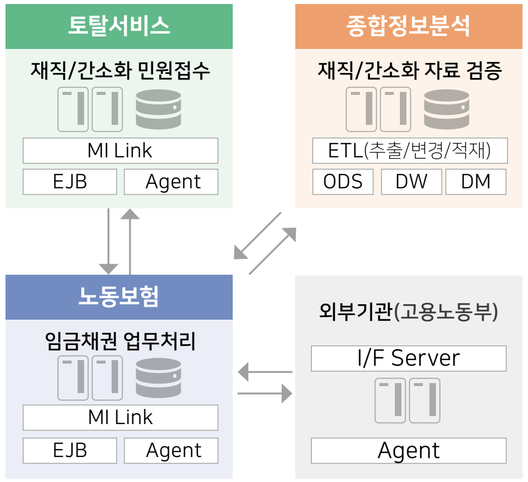
고용노동부는 체불근로자는 물론 재직근로자의 생계 또한 안정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체불임금을 더 빠르고 쉽게 지급 받을 수 있도록 체불청산 제도 보완에 나섰습니다. 법 개정 후 시행까지의 준비기간은 약 6개월로 각 기관의 전산개편 연계부터 업무매뉴얼 마련, 인력 증원 등의 준비와 새로운 제도 시행을 위해 필요한 예산 등의 문제는 걸림돌로 작용하였습니다.

하지만 관련 부서와 원활한 소통으로 협업을 강화해나갔고 공단지사를 방문해 대지급금 업무 현황을 파악하는 한편 담당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전산시스템을 확인하는 작업을 거쳤습니다. 그리고 재정당국과 협력하여 시스템 개선 예산을 증액하는 방안을 통해 예산을 마련하는 한편 체불에 대한 사업주의 책임을 강화하도록 하였습니다. 사업주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납부 의지가 있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분할납부 등 자발적 납부를 유도해 나간 것입니다.

## 전산 개발 인프라 구축

**임금채권 시스템 화면 개발 및 개선**

**내·외부 자료연계(EAI)**



이 같은 제도 개선 추진을 통해 대지급금 지급절차 간소화에 성공하여 평균 10개월 이상 소요 기간을 4.5개월로 단축한 것은 물론 2021년 1월부터 2022년 8월까지 167천 명을 지원하였으며, 이 중 66천 명이 개선 제도를 통해 신속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같이 임금체불근로자뿐 아니라 재직자 보호 확대로 모든 근로자의 임금체불 보호 체계를 구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관행을 깨고 제도 개선을 향해 다가간 노력이 드디어 근로자의 생활안정이라는 울타리를 마련하게 것입니다.

제도 개선 추진을 통해
대지급금 지급절차 간소화에 성공하여
평균 10개월 이상 소요 기간을 4.5개월로 단축

**담당자 한마디**

**정 장 석**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

퇴직금을 받지 못해 동료들과 함께 퇴사 처리되었지만 퇴직금을 주겠다는 회사 측만 믿고 7개월을 기다렸다는 한 근로자는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받급받으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는 안내를 받고 퇴직금을 받게 되어 다행이었다는 이야기를 전해왔습니다. 근로자들의 안정적인 생계를 위해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대 상
지자체 부문

# 제도적 허들을 넘어, 건설 중인 건축물 내 **현장사무소 설치 문제 해결**

**02** 경기도 고양시

아파트 건설 공사장 현장사무소는 공사 착공 시 부지 내 가설 건축물을 임시 설치하여 운영하지만 공사를 마무리할 시점에는 이를 철거한 후 공사 중인 건물 내에 임시로 설치하여 운영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나, 주택법상 이러한 경우 규제를 받고 있다.
국토부 또한 현행 주택법을 근거로 건축물의 현장사무소 설치는 준공 전 무단 사용이라고 해석하고 있는 상황으로 이에 경기도 고양시는 국토부에 제도 개선을 건의하고 국무조정실 규제 개선 간담회 등을 통해 법령 개정 없이 건축물 내 현장사무소 설치에 대한 규제 개선을 이끌어 건설업계의 애로를 해결하였다.

땅
땅 땅
00 아파트 건설
현장사무소를 철거할 때가 됐네요!
그래도 할 수 없죠... 현행법도 그렇고... 보행통로도 개설해야 하니까요
현장사무소가 없으면 비상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신속하게 대처하기 어려운데...
으음
위이잉
떵 떵 떵
아파트 단지 내 어린이집을 현장사무소로 사용해도 될까요?
할 수 없지! 우리만 이러는 것도 아니니깐...
린이집
아직 완공 전인데 현장사무소가 없다는게... 참...
소장님! 큰일 났습니다! 지금 민원이 들어왔는데 법 위반사항이라고 단속을 한답니다.
뭐?!!
주택법에 따라 사용검사 전에는 주택 또는 대지를 사용할 수 없음 '무단사용!'
무단사용
전기차 충전소
고양특례시청
고양특례시의회

현장사무소가 현장 외부에 있으면 관리에 큰 어려움을 겪습니다!
국토부에 유권해석을 요청했는데 임시사용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주택과 회의실
현장사무소 설치를 건설 과정의 일부로 보는 해석도 있어요
해결 방안을 찾읍시다
공사 마무리 단계에서 항상 현장사무소 이전을 고민하게 됩니다! 고양시가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 주기를 기대합니다!
주택건설사업장
00건설사 관계자 대표
공사장 현장사무소 위법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 노력
경기도 주택정책과 시군 주택과장 회의 안건상정 (2022.2.)
국토교통부
임시사용승인 제도개선 안건
국토부 임시사용승인 제도개선 건의 (2022. 2.)
국무조정실 규제개선 간담회 개최 (2022. 5.)
국무조정실
건설 중인 건축물 내에 현장사무소를 설치하는 행위는 건설과정의 일부로서 무단사용으로 보기 어렵다.
와
와
짝 짝 짝 짝 짝
고양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건축물 내 현장사무소 설치문제를 해결해 준 덕분에 근무환경도 개선되었고 사고 위험도 크게 줄었어!
맞아! 안전이 최고지! 오늘도 하루 파이팅 해 보자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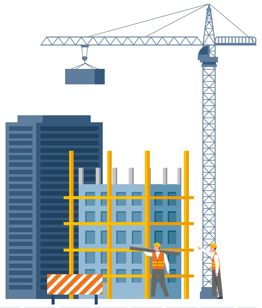
## 고양시, 협업과 소통 행정으로 건설업계의 시름을 해소하다

아파트 부지 공사를 마무리할 시점에는 그 공간에 보행통로, 조경공사 등을 진행하면서 기존의 가설건축물을 철거함에 따라 공사현장 부지 내 현장사무소를 확보하기 어렵습니다. 결국 대부분의 아파트 공사현장에서는 부득이하게 공사 중인 건물 내에 준공 전 현장사무소를 설치·운영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를 준공 전 무단 사용은 위법이라며, 지자체에 단속을 요청하는 등 민원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국토부 또한 '무단사용'이라고 유권 해석하고 있어 건설업계에서는 수년간 애로를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장사무소가 공사 현장 외부에 있을 경우 건설사업장의 관리에 어려움이 따르고 자칫 사고 발생 시 즉각적인 대처가 어려워 추가적인 안전사고 발생의 우려도 있어 현장 내 설치가 합리적입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양시를 포함한 여러 지자체에서 국토부에 유권해석을 요청했지만 임시사용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해석과 현장사무소 설치는 건설과정의 일부로 보아 무단 사용으로 보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는 해석 등이 있어 행정처리에 혼선을 빚고 있습니다. 이에 고양시의 주도로 경기도, 국토부, 국무조정실이 함께 규제 제도 개선에 나섰습니다.

2021년 11월, 고양시 덕은지구 아파트 공사장 준공 전 현장사무소 사용에 대한 단속 요청 민원을 계기로 현장소장들과 대책 협의를 갖고 고양시와 3개 구청 간 긴급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2022년 2월에는 경기도 주관으로 시·군 주택과장 회의 안건으로 상정하여 공사용 현장사무소 임시사용승인 제도 개선 건의안에 대해 논의를 가졌으며 이어 5월에는 국무조정실과 규제개선에 대한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아울러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를 활용하여 건설업계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수년간 고착화된 건설업계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2022년 7월 28일 국토부에서 법령 개정 없이도 "건설 중인 건축물 내에 현장사무소를 설치하는 행위는 건설과정의 일부로서 주택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무단 사용으로 보기 어렵다"는 적극적인 유권해석을 통보해왔습니다. 이로써 고양시뿐만 아니라 전국 지자체 등에 전파되어 즉시 적용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같이 현장사무소 설치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공사현장 종사자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안전한 현장관리로 중대재해 예방과 근로자의 생명과 신체 보호에 기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행정기관 간 협업을 통한 적극행정의 결실을 맺게 된 것입니다.



**담당자 한마디**

**유 호 권** | 고경기도 고양시 주택과

고양시 덕은지구 아파트 공사관계자는 중대재해법이 강화되어 안전에 신경 쓸 수밖에 없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감수하며 현장사무소를 운영해 왔는데, 고양시와 경기도, 국토부, 국무조정실의 적극행정으로 건설업계 전체의 오래된 숙원사업을 해결해주어 감사하다는 뜻을 전해 왔습니다.

최우수상
중앙 부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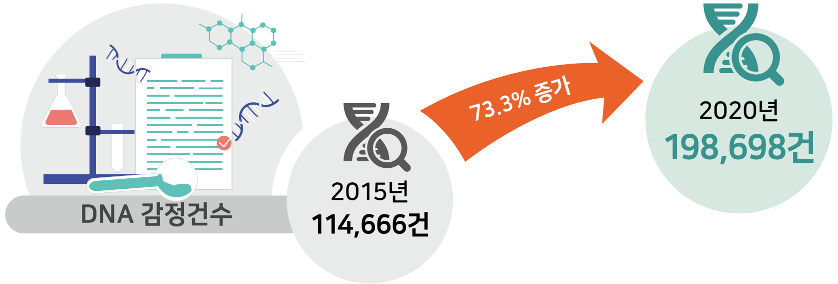
# DNA 감정 수요 폭증·부족한 인프라, 「신속 DNA 분석기」 개발로 극복

03 경찰청

DNA 감정은 각종 사건 해결에 활용도가 증가하고 있지만 감정 결과 답변까지의 소요 시간은 평균 2주일로 신속한 현장 요구를 충족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경찰청은 DNA 수사 지원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90분 내로 DNA를 분석할 수 있는 '신속 DNA 분석기'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신원불상 변사자의 신속한 신원 확인으로 유족의 고통을 절감하는 데 기여하고 있으며 용의자와 현장 DNA 긴급대조로 수사의 객관성 확보는 물론 국민 인권 향상을 도모하고 있다.








**Q DNA 분석은 각종 사건 해결에 활용도가 무척 높은 것으로 전해져 있습니다. DNA 감정 건수와 DNA 감정 회보까지 시간은 얼마나 소요되는지요.**

국과수의 DNA 감정건수는 2015년 114,666건에서 2020년 198,698건으로 73.3%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DNA의 높은 개인 식별력을 바탕으로 미제사건 등 각종 사건 해결에 활용도가 증가함에 따라 DNA 감정 수요가 큰 폭으로 상승한 것이죠. 하지만 감정기관의 한정된 인프라로 DNA 감정 회보까지 평균 2주일이 소요됩니다. 감정기관 DNA 감정 건수 폭증으로 유전자 감정 업무가 지연되면서 현재는 3주일 이상 소요되는 실정입니다.

**Q 신속 DNA 분석기 도입에 있어 어떤 어려운 점이 있었는지요.**

신속 DNA 분석기는 국내 최초 도입하여 운영하는 만큼 표준 운영지침과 활용방안 마련, 그리고 대외적인 공신력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한 사안이었습니다. 주요 범죄나 대형 재난사고 현장 등에 출동하여 신속한 DNA 분석을 위해서는 장비 운용과 DNA 분석 결과를 해석하는 전문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했지요.

**Q 신속 DNA 분석기의 공신력을 확보하기 위한 과정에 대해 설명해주세요.**

상피세포, 혈흔, 타액 등 다양한 시료에 관한 연구분석을 135회 진행하고, 현장 시료 분석을 비롯해 감정기관 결과 비교를 통한 실증데이터 분석은 263회 진행했습니다. 대외 공신력 확보를 위해 연구, 발표 등 학계 검증을 추진했고요. 또한 객관성 확보를 위해 성균관대 과학수사학과 바이오포렌식 박사 과정을 밟으며 저의 전문성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Q 국내 최초라는 것은 선례가 없는 것이라 추진에 어려움이 컸을 것 같은데요. 절차와 기준은 어떻게 마련해나갔나요?**

FBI Guidelines, Scientific Working Group on DNA Analysis Methods 등 해외 표준을 기반으로 표준업무처리지침, 실무매뉴얼 등 표준절차 기준안 마련을 추진해 2022년 8월에 완비하였습니다. 또한 주요 활용방안을 자체 발굴하고 서울청 신속 DNA 분석기 시범운영 기본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이렇게 수립한 절차와 기준을 바탕으로 실제 사건들에 적용해 보면서 우리나라에 적절한 기준으로 다듬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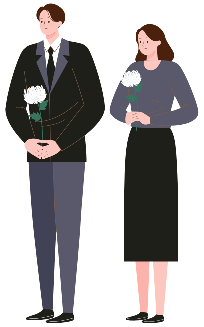
**Q 신속 DNA 분석기 운영의 효율을 더욱 높이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해외 활용사례를 조사하는 한편 국내 적용 방안 분석을 통해 범죄 현장이나 대형 재난 현장 진출 분석이 가능한 장비와 시스템 개발을 추진 중입니다. 또한 24시간 교대근무 체계로 현장 감식팀과의 협력으로 365일 24시간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운영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한시적 현업과 탄력근무 등 업무 조절을 통해 야간, 휴일에도 신속 대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Q 신속 DNA 분석기 운영으로 얻게 된 가장 큰 성과는 무엇으로 꼽을 수 있을까요?**

미성년 변사자의 경우에는 경찰 지문 데이터베이스에 미등록되어 있고, 부패가 진행된 변사자의 경우 지문이 부패되고 훼손되어 신원확인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신속 DNA 분석기를 활용함으로써 24시간 이내 분석할 수 있게 되었고, 친자 확인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DNA 분석 결과가 신속하게 확인되어 변사자 안치에 소요되는 물질적 비용이나 변사자 인계가 지연되는 등 유족의 심적인 고통을 최소화하게 된 것을 무엇보다 큰 성과로 여기고 있습니다.

DNA 분석 결과가 신속하게 확인되어
변사자 안치에 소요되는 물질적 비용이나
변사자 인계가 지연되는 등
유족의 심적인 고통을 최소화하게 된 것을
무엇보다 큰 성과로 여기고 있습니다.



### Q 이동식 신속 DNA 분석 작업대 겸 케이스를 발명해 시제품을 제작했는데요. 이 장비에 대해 설명 부탁합니다.

이동식 신속 DNA 분석 작업대 겸 케이스는 대형 재난, 사고 등 현장에서 신속 DNA 분석기의 활용을 극대화할 수 있는 장비입니다. 전원이 차단되면 다시 분석하기 위해 상당한 세팅 시간이 필요한 신속 DNA 분석기를 현장에 곧바로 적용하기 위해 이동 중 상시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전력장치를 탑재하였고, 시약 보관을 위한 냉장 장치 등을 구비하여 현장 진출 및 신속 대응을 위한 기동력까지 확보할 수 있는 전용 케이스입니다. 또한 이동 중에도 분석을 진행할 수 있으며 현장에서는 테이블로 변형하여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장점을 인정받아 이 장비는 직무발명 국가 승계가 결정되어 특허 심사 진행 중입니다.

### Q 신속한 긴급 DNA 대조로 사건 수사에 기여한 사례가 있다면 소개해주세요.

강간 사건 수사 중에 검거한 용의자에 대해 신속 DNA 분석을 했고, 국과수 현장 DNA와 일치하여 영장 청구 보강자료로 활용한 예가 있습니다. 또한 강제추행 사건에서 수사를 받고 있던 용의자에 대해 신속 DNA 분석을 실시해 피해자의 옷에서 나온 DNA와 다르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신속히 수사 대상에서 배제하여 억울하게 조사받을 뻔했던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는 한편, 빠르게 수사 방향을 확대하여 수사 효율을 높이기도 하였습니다. 미성년자를 성추행한 사건 관련 수사 중 검거한 용의자에 대해서도 현장 증거물에서 정액 반응을 확인했고 DNA가 일치함을 확인해 영장 청구 보강자료로 활용한 일도 있습니다.

### Q 혈흔 형태의 신속한 분석의 중요성에 대해 설명해주세요.

가족 간 사건이 급증하면서 혈흔 형태 분석 등 현장재구성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가족 등 동거인 간의 사건에서는 지문이나 DNA가 검출되어도 혐의를 입증하는 데 어려움이 따릅니다. 특히 피를 흘린 사람이 두 명 이상인 경우에는 혈흔 형태 분석이 어려워 DNA 분석을 병행하지만 분석에 3주일 이상 소요되어 수사 초기 활용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신속 DNA 분석을 실시함으로써 신속한 혈흔 형태 분석을 통해 현장재구성이 가능하며 수사 초기에 과학적 증거를 확보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 기대됩니다.

**담당자 한마디**

**이 준 희** | 경찰청 과학수사과

투신 후 한강에 표류 중이던 미성년 변사자에 대한 신속 DNA 분석을 통해 24시간 이내 친자관계를 확인한 후 시신을 인계해 유족의 고통을 경감하는 데 기여하였습니다. 앞으로 추가로 도입되는 장비를 활용할 담당자에 분석 체계, 활용방안, 노하우 등의 교육을 진행하여 효과를 확산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우수상
중앙 부문

# 우크라이나 전쟁 중 **미사일과 시가전을 뚫고** 우리 교민들의 안전한 출국을 지원하다.

04 외교부

2022년 2월 24일 새벽,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직후 주우크라이나대사관은 출국하지 못한 교민들을 긴급 소집하여 공관차량과 개인차량을 이용해 키이우로부터 대피를 시작했다. 피난길에 나선 수많은 우크라이나인들로 도로는 마비되었고, 연료 또한 구하기도 힘든 상황이었다. 이에 주우크라이나대사관은 모든 정보와 조력을 제공해 교민들을 성공적으로 출국시키는 데 성공하였다. 우크라이나 전쟁, 그 긴박했던 현장을 따라가본다.

###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교민이 가야, 우리도 간다!"

2월 24일 새벽,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습니다. 주우크라이나대사관은 출국하지 못한 교민들을 긴급 소집하여 공관차량과 개인차량을 이용해 키이우로부터 대피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도로는 수많은 피난민들로 마비되었고 유류 제한으로 차 연료 또한 구하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키이우 시내를 벗어나는 데에만 10시간이 소요되었고 피난길은 시내 총격전, 탱크 행렬과 대공포의 위협으로 아비규환을 방불케 했습니다.

**1. 24.**
주우크라이나대사관 안전 간담회 개최,
개별 대피책과 정부 대응안 조율

**1. 25.**
우크라이나 남동북부 15개 주(州)
출국 권고 경보

**1. 26.**
전쟁 발발 전, 교민들의 거주지역
전수 파악과 대피계획 수립

**2월**
전쟁 발발 전, 교민 전원에게 응급키트배낭 전달
한국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차량용
스티커 제작, 배포

**2. 24.**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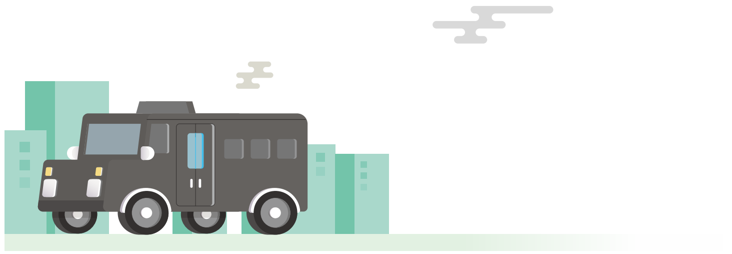
**2. 25.**
김현우, 정경배 행정직원이 차량 4대 인솔하여
피난길에 오름

**2. 26.**
대사관 직원들이 교민을 이끌고 체르니우치 도착

**2. 28.**
교민 3명, 공관 지원으로
루마니아로 대피

**3. 2.**
김형태 대사, 만삭의 산모와 함께
있던 교민 도착 확인 후 키이우 떠남

**3. 3.**
김현우 전문관, 30시간이
넘는 시간을 운전해 국경 도착



교민들의 안전한 대피를 돕기 위한 노력은 다각도로 전개되었습니다.

김형태 주우크라이나대사는 교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대사관이 교민들의 안전한 대피를 위해 가능한 모든 정보와 조력을 제공하도록 하였습니다. 전쟁 발발 다음날, 김현우, 정경배 행정직원이 교민 4명을 공관차량에 탑승시키고 교민들이 탑승한 차량 4대를 인솔하여 피난길에 올랐습니다.

이를 시작으로, 대사관 직원들이 교민을 이끌고 함께 키이우 시내를 벗어나던 중 시가전이 벌어지는 광경을 목격하고 급히 선회하여 다른 대피로를 모색하여 구사일생으로 체르니우치에 도착했습니다. 김형태 대사는 UN 컨보이 행렬에 합류하여 시내를 벗어나려 하였으나, 만삭의 산모와 함께 가고 있다며 기다려 달라는 교민의 전화를 받고 UN 컨보이가 떠난 뒤 동 교민이 오고 나서야 키이우를 떠났습니다.

교민들의 안전한 대피를 돕기 위한 노력은 다각도로 전개되었습니다. 주우크라이나대사관은 국경 검문소 상황과 탈출 루트를 확인하여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방공호 위치, 교통수단 관련 정보를 홈페이지와 SNS를 통해 게재하였습니다. 이미 전쟁이 발발하기 전 비상키트배낭을 잔류교민 전원에게 나눠주고 비상사태 발생 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한국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차량용 스티커를 배포





하여 신속하게 국경을 통과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여권을 분실한 교민에게 비상용으로 준비해두었던 공백여권에 수기로 정보를 작성하여 국경을 넘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기지를 발휘하였습니다. 이같이 교민과 교민가족 총 67명을 공관차량으로 직접 안전하게 대피시켰으며, 교민들과 현지상황을 지속 공유하며 100여 명의 무위 출국을 지원하는 등 재외국민보호 활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였습니다.

**담당자 한마디**

**김 형 태** | 주우크라이나대사

UN 컨보이 행렬에 합류하여 시내를 벗어나려 할 때 만삭의 산모와 함께 지금 키이우로 가고 있다며 기다려달라는 교민의 전화를 받고 떠나는 컨보이 행렬을 바라보며 마지막 잔류 교민이 올 때까지 기다리다 임신 8개월의 산모를 함께 태우고 천신만고 끝에 체르니우치에 도착하였습니다.

# 지방 소멸의 위기,
# 청년에게서 답을 찾다!

## 05 전라남도 강진군

농촌 고령화와 인구감소 문제는 빈집·빈점포의 증가와 관리부실로 이어지면서 안전사고, 범죄, 경관훼손 등의 여러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으며, 이는 다시 주거환경 저하와 인구이탈 요인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다른 문제는 빈집을 사유재산으로만 보는 인식입니다. 강진군은 빈집은 '활용이 아닌 철거' 대상으로 여겨지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인구감소와 빈집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방안을 모색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부서에서 빈집의 정보 파악을 비롯해 빈집 정비, 빈집 활용 업무를 개별적으로 추진하다 보니 빈집 정보를 체계적으로 구축하기가 어려웠고, 방치 기간이 긴 빈집의 경우 구조적 문제가 심각하고, 소유 구조가 복잡하며 불법 건축물이 많아 활용 가능한 빈집을 찾는 데 어려움이 따랐습니다. 빈집 문제는 많은 사회적 문제를 불러일으키고 있음에도 소유자 입장에서는 장기적 관점의 부동산 가치를 고려해 빈집을 매매·임대할 의사가 없고 투자도 꺼리는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빈집 활용사업 추진 시 매입 보상비 협상과 리모델링 지원 시 자부담 요건 등으로 협의가 어렵고 공간에 맞는 입주자를 찾는 것 또한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 청년들의 농촌 유입을 위해 수요자 중심의 새로운 정책 마련에 나서다

다양한 청년창업 지원사업이 시행되고 있지만 경험이 많지 않은 청년들이 창업에 성공하기는 어려운 여건으로, 단기간에 폐업과 인구 이탈의 가능성이 높은 것도 문제로 제기되었습니다. 또한 지리적 여건과 교통 접근성, 문화 인프라가 취약한 인구 3만 명의 작은 소도시로 청년들을 유입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일도 녹록지 않았습니다.

고심 끝에 강진군은 영농기술 지원 중심의 귀농 정책에서 청년층의 새로운 라이프스타일을 반영한 주거·일·커뮤니티 종합 지원 귀촌 정책을 마련해나가기로 하였습니다. 먼저 청년 워크숍 등 사전 수요조사를 반영하여 정책을 기획하였고, 빈집을 활용하여 청년공간을 조성하였으며, 청년 협업 마케팅 플랫폼 협동조합을 설립하여 운영 지원에 나섰습니다. 아울러 청년 커뮤니티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운영하는 등 환경변화에 대응한 수요자 중심의 새로운 정책 발굴에 나선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 활용이 가능한 빈집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가가호호 현장조사에 착수하였습니다.

빈집 소유주의 설득과 동의를 구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보증금 무료, 반값 임대료, 리모델링 기간 임대료 무료 등의 지원을 통해 강진군과 건물주, 청년 임차인 간의 이해 조정과 협조에도 견인차 역할을 하였습니다. 또한 행정 부서 간 협업과 타 지자체와의 협력으로 빈집 리모델링, 창업 및 마케팅 지원, 상품개발 지원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서울시 지역연계형 청년창업 지원사업인 '넥스트 로컬'을 연계해 외지 청년을 발굴하고 유입을 유도해나갔습니다.

지리적 여건과 교통 접근성, 문화 인프라가
취약한 인구 3만 명의 작은 소도시로 청년들을
유입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일도 녹록지 않았습니다.

### 인구소멸과 빈집 문제를 동시에 해결! 더욱 확대되는 빈집 활용 사업

청년들의 창업 실패율을 줄이고,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단편적인 지원 중심에서 벗어나 '공간만들기(리모델링) – 사람키우기(창업교육) – 공간과 사람 잇기(공간에 맞는 사람 매칭) – 사람과 사람 잇기(커뮤니티 프로그램 지원)' 종합 지원에 나섰습니다. 리모델링 지원 후 빈집 매매 상황 등 예상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변호사의 법률자문을 통해 리모델링비 반납 조건 계약을 명시하는 등 선제적 장치도 마련하였습니다. 청년이 사업 분야를 고려해 공간설계와 리모델링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사전컨설팅 감사제도를 활용하였습니다.

이 같은 사업 추진 결과 빈집을 활용한 청년 주택 3호, 청년점포 5팀, 청년 복합공간 1호, 청년마을 만들기 거점공간 1호를 조성하였습니다. 빈집 리모델링 사업 후 해당 건물 주변까지 민간참여 리모델링이 확산되는 효과를 얻음으로써 2022년부터 인구소멸 대응기금으로 빈집 활용 사업을 확대한다는 방침입니다. 단순히 공간을 조성하는 데 그치지 않고 창업교육을 비롯해 컨설팅, 각종 창업지원사업 연계, 청년 커뮤니티 프로그램 운영 등 지속성 확보를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한 결과입니다.

강진군은 지역 자원을 활용한 다양한 상품과 비즈니스를 창출한 사례로 큰 호응을 얻고 있으며 '넥스트로컬'의 협력 운영으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강진군 23팀 34명이 참여함으로써 청년의 창의적 역량으로 지역자원을 활용한 가치를 창출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 중 9팀이 강진 지역자원을 활용한 상품개발과 창업에 성공했으며, 강진지역 창업 및 정착에는 3팀이, 로컬편집숍 입점과 공동 마케팅에는 5팀이 꿈을 이루었습니다.

빈집 활용 사업을 통해 강진에 이주·정착한 청년들은 각자의 영역에서 지역을 새롭게 만드는 일에 끊임없이 도전하고 있습니다. 지역과의 관계 맺기를 이어가면서 지역자원을 활용한 비즈니스 확대와 고도화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2년도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청년 마을 만들기 사업 추진 단체로 이들 청년 단체가 선정되면서 이제는 청년들이 주도해서 또 다른 청년들의 강진 이주를 이끄는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인구 감소와 빈집 문제 등 지역 쇠퇴에 대응하는 적극 행정의 성과가 민간영역으로 확산되면서 지속가능성을 높여내고 있으며, 지역의 내일을 새롭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담당자 한마디**

**위 길 복** | 전라남도 강진군 건설과

강진군은 빈집 활용 청년 유입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세 가지에 주목했습니다. 공간과 일, 그리고 관계입니다. 청년들이 자리 잡고 살아갈 기반이 되는 공간을 만드는 것, 청년의 일을 지원하는 것, 좋은 관계와 사회적 지지망을 만드는 것 모두 지역공동체의 연대와 협력을 필요로 했습니다. 적극 행정은 바로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지역사회의 협력을 이끌어 내는 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 우수상 중앙 부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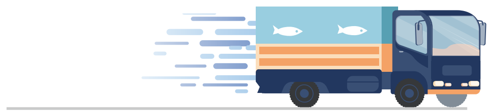
# 수산물의 안전을 지키는 신속 검사키트로 부정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다.

**06** 식품의약품안전처

검사하는 시간 동안
수산물의 품질이 저하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유통 전에 살아있는 활어의 혈액이나
근육조직 등 생체시료를
신속히 검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산물은 출하에서 소비까지 보통 5시간으로 유통시간이 너무 짧고 유통경로 또한 복잡하여 마트나 시장에서 수거한 수산물에 부적합 판정이 내려질 경우, 이미 해당 수산물이 소비되어 회수나 폐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유통 전 수산물 도매시장 등 현장 시험·검사에 적용이 가능한 신속 검사키트의 개발이 시급합니다. 무엇보다 정밀검사의 경우 분석 시간이 많이 소요됨에 따라 검사하는 시간 동안 수산물의 품질이 저하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유통 전에 살아있는 활어의 혈액이나 근육조직 등 생체시료를 신속히 검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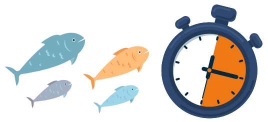
식약처는 2021년 1월 26일, 수산물의 항생제 정밀검사 시간에 따른 품질 저하의 문제점을 공유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잔류물질과, 농수산물안전정책과, 키트 개발자와 3회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그리고 회의를 통해 항생제 검사 적용 가능 여부와 신속 검사키트 개발의 타당성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2월 4일에는 농수산물안전정책과에서 신속검사키트 개발을 공식 요청하였고, 용역연구 내용 변경 추진 안건을 제출, 2월 22일에는 기획조정과에서 전문 분과위원회 안건 심의 후 변경을 승인하였습니다.







### 수산물 검사시간을 30분으로 단축!
### 신속성은 물론 정확성을 입증하다



2021년 9월 30일, 드디어 수산물용 항생제 신속 검사키트 개발에 성공하여 식약처를 비롯해 시·도보환연 6개 검사기관에서 정밀검사 및 신속 검사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이에 수산물을 유통하기 전에 신속검사키트를 이용하여 부적합 다빈도 및 판매량이 높은 항생제를 검사하여 부적합 제품을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회수와 폐기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신속 검사키트 개발 후 2021년 10월부터 12월까지 부적합 수산물은 현장에서 즉시 차단하도록 3개월간 시범 적용을 시행한 결과 450건 중 16건이 양성으로 판정됨으로써 신속성과 정확성을 입증하였습니다. 대상 어종은 조피볼락, 넙치, 미꾸라지, 장어, 새우, 연어, 붕어, 돔류 총 8종입니다.

2022년 4월 19일에는 덱사메타손에 특이적으로 결합하여 항체를 생성하는 하이브리도마(Hybridoma)세포주와 이를 활용한 신속 검사키트에 대해 특허 출원하였으며, 특허등록 후, 기술이전을 실시하여 국가시험 검사기관 및 민간검사기관 등 현장에서 신속 검사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검사키트 개발로 시료 전처리를 포함하여 검사 시간이 30분으로 단축되어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으며, 검사비용 또한 1건당 기존 15만 원에서 7천 원으로 획기적인 비용 절감에 성공하였습니다. 현장 검사기관에 신속 간이검사키트를 적용하여 항생제 8종에 대한 검사를 강화함으로써 유통 전 부적합 제품의 차단율을 높일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담당자 한마디**

**최 장 덕** | 전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위해평가부

수산물용 항생제 신속 검사키트를 개발하여 수산물 도매시장 등 현장 검사에 적용함으로써 부적합한 수산물의 유통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 더욱 열심히 업무에 임하겠습니다.

우수상
공공 부문

# 사각지대에 있는
# 숨은 피해 소비자까지 구제하라!

**07** 한국소비자원

소비자 피해의 확산을 방지하고 피해구제 신청을 하지 못해 적정한 배상을 받지 못하는 소비자를 구제할 수 있는 적극적인 정책 추진에 나섰습니다.

사업자의 부당한 행위로 발생한 피해를 보상받기 위해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하는 소비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발생하는 피해와 함께 다수의 소비자가 동일·유사한 유형의 피해를 입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지만 정보의 부재와 피해구제 신청 절차의 어려움 등으로 피해 배상을 받지 못하는 소비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 피해의 확산을 방지하고 피해구제 신청을 하지 못해 적정한 배상을 받지 못하는 소비자를 구제할 수 있는 적극적인 정책 추진에 나섰습니다.

먼저 내부 전문가를 활용하여 법률을 검토하고 관련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합의안을 마련·권고하는 등 신뢰도를 높이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또한 사건과 관련한 피해자 모임, 학생회, 입주자대표회의 등 이해관계자와의 협력과 공동 대응을 통해 권고에 대한 사업자의 수용도를 높였으며, 사건 처리 전후로 지방자치단체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공동 대응을 확대해나갔습니다.

### 10만여 명의 소비자 피해구제 달성, 일괄구제 처리가이드 마련으로 전국 확대 시행

2021년부터 현재까지 개별적으로 접수된 피해구제 신청 19건의 일괄구제로 약 93,500명에 달하는 소비자의 피해구제를 달성하였고 이에 약 114억 원의 배상 성과를 창출하였습니다. 2022년 2월에는 '일괄구제 처리가이드'를 마련하여 배포함으로써 수도권에서 이루어진 일괄구제를 전국으로 확대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는 코로나19로 운영하지 않은 기숙사 비용을 일괄 환급한 예입니다. 한 대학교 기숙사에 대한 비용 미환급 피해가 접수되었지만 기숙사 운영사와 학교 간의 갈등, 경영

상태 악화 등으로 환급이 불투명해진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경기도와 대학, 총학생회와의 협업을 통해 피해 소비자를 기숙사 이용 학생 전체로 확대하여 일괄 환급 처리를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총 1,476명의 학생 전원에게 기숙사비가 환급되어 약 21억 원의 배상 효과가 발생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 한국소비자원의 권고로 약관 개선에 교환 처리까지

온라인 교육 콘텐츠 중단에 따른 일괄 환급도 이루어졌습니다. 온라인 교육 사이트의 강사가 구속되면서 해당 강사의 강의가 전면 중단되었으나 사업자가 약관을 근거로 계약 중도해지와 환급을 거부한 것입니다. 이에 사업자 약관의 불공정성에 대한 법적 검토를 거쳐 계속거래에 의한 중도해지 및 환급 합의(안)을 마련하여 피해 소비자를 전체 수강생으로 확대하여 환급을 권고하였습니다. 이에 계약해지를 요청한 약 54,000명의 수강생에게 환급 처리가 이루어졌고 이에 약 20억 원의 배상 효과가 발생하였습니다. 해당 교육사이트는 한국소비자원의 권고를 수용하여 계약 중도 해지가 가능하도록 약관을 개선하였습니다.

품질이 불량한 카본매트에 대해 일괄적으로 교환이 이루어지기도 했습니다. 소비자상담 및 포털사이트 검색을 통해 판매된 일부 카본매트에 대해 사업자가 개별 소비자에게 연락해 제품을 회수한 후 수리·교환 처리하고 있다는 정보를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사업자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와 간담회를 통해 생산 공정에 따른 불량이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교환 대상을 전 제품으로 확대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약 3개월 동안 판매된 6,200개의 매트를 모두 교환 처리하기로 하여 약 5억 5천만 원의 배상 효과가 발생하였습니다.

대형 쇼핑몰에 입점한 영어키즈카페 11개 지점이 사전안내가 미흡한 상태에서 휴업한 후 연락이 두절되어 대금을 선 납부한 소비자들에게 피해가 발생한 사건이 발생하여 대형 쇼핑몰과의 협의를 통해 대형 쇼핑몰들이 소비자에게 배상한 후 키즈카페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안을 이끌어냈습니다. 피해구제 절차의 직접 피신청인이 아닌 대형 쇼핑몰들과의 합의를 도출하여 피해 확산을 방지한 것입니다. 이후 피해자 단톡방 등을 통해 한국소비자원과 대형 쇼핑몰에 대한 많은 격려가 쏟아지는 등 소비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 주요 성과

수혜 소비자 **19명**

배상 효과 **2천만 원**

↓ 일괄 구제

수혜 소비자 **93,500명**

배상 효과 **114억 원**

**담당자 한마디**

**원 혜 일** | 한국소비자원 경기지원

한국소비자원의 합의 권고는 강제력이 없어 사업자의 수용도를 높이는 방안이 절실했습니다. 하지만 합의안을 마련하여 권고함으로써 신뢰도를 높이고 이해관계자와의 협력 등 다각도의 노력으로 사각지대에 있는 숨은 피해 소비자까지 구제할 수 있었습니다.

2023년
**적극행정 우수사례집**

# CHAPTER Ⅲ

# 국민 행복을 위해


01 중앙 부문 | **행정안전부**
- 잠자고 있는 당신의 돈을 돌려드립니다. 행복을 찾아드립니다.

02 지자체 부문 | **경기 안양시**
- 갈등에서 협력으로, 도민과 자연이 함께 누리는 깨끗한 안양천 조성

03 지방공사·공단 부문 | **부산시설공단**
- 민·관이 함께 해결한 교통 정체, 함께 누리는 행복

04 중앙 부문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를 보다 안전하고 유용하게, 국민의 삶을 보다 편하고 유익하게

05 중앙 부문 | **국가보훈처**
- 한 장의 교통카드로 전국의 대중교통을 편리하게 이용하다.

06 지방공사·공단 부문 | **서울교통공사**
- 아플 땐 지하철을 방문하세요. 국민 건강 서비스, 행복 서비스

07 지방공사·공단 부문 | **강릉관광개발공사**
- 강릉의 안심 여행 서비스 “해피하게 오감” 프로젝트

08 지자체 부문 | **대전 대덕구**
- 지방세 납세증명서도 무인민원발급기에서? 국민 불편 해소·국민 편익 증진

대 상
중앙 부문

# 잠자고 있는 당신의 돈을 돌려드립니다. 행복을 찾아드립니다.

**01** 행정안전부

지자체에 자동차 등록 또는 계약체결, 각종 인·허가 시, 지역개발채권을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한다. 하지만 이러한 채권은 5년 후 만기가 되면 매입필증을 가지고 지자체의 주거래 은행에 반드시 직접 방문하여야 환급받을 수 있다. 많은 국민들이 채권을 보유했다는 사실을 망각하는 등의 문제로 누적된 미환급 금액은 2,391억 원에 달하고 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국민이 채권을 쉽게 환급받을 수 있도록 불편한 규제 절차와 시스템 개선에 나섰다.





**타임라인**

**2021. 10.**
누적된 미환급 금액
2,391억원 발생

**2021. 4. 28. ~ 9. 15.**
관계기관 회의

### 자동상환 시스템으로 채권조회 및 상환까지 1분 안에 해결 가능!

국민이 의무적으로 매입한 채권임에도 이를 상환받고자 할 때는 지정된 금융기관으로 직접 방문을 해야 환급이 가능한 기존 제도와 절차는 국민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기존 미환급 채권은 온라인 환급 프로그램을 통해 편리함을 도모하고 향후 발행되는 채권은 자동으로 상환되도록 시스템을 개선하는 방안에 착수했습니다. 온라인 환급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아이디어는 정부포털 '정부24' 내 채권조회 시스템을 구축해 민원인이 채권을 조회하고 상환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서 착안하였습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정부24 내 프로그램 개발과 서버 구축을 위해 관계기관과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하지만 그간 발행된 수십만 건의 채권에 대한 소유권 변동 등 권리관계 변동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고, 기존의 채권보유방식은 휴대전화 등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지 않아 채권보유자에게 직접 연락을 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기존 미환급 채권은 온라인 환급 프로그램을 통해 즉시 상환하고 향후 발행되는 채권은 자동으로 상환되도록 시스템을 개선하는 방안에 착수했습니다.

또한, 정보 관리주체가 민간 금융기관 및 자치단체에 있는 개인정보를 중앙 시스템과 연계할 경우 첫째, 관리주체 문제, 둘째, 신규 서버 설치 및 프로그램 개발에 소요되는 막대한 개발비용 부담 문제, 셋째, 기존 노후화된 중앙정부 서버의 시스템 마비 가능성 등의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게다가 관계기관에서는, 제도개선의 취지는 이해하나 채권처리 프로세서가 극도로 복잡하고 관리주체의 분산, 개발 비용부담 문제 등 도저히 추진이 불가한 사업이라 판단하였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여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문제점을 비롯하여 현황 조사, 제도개선의 필요성 확산과 법령 정비, 그리고 프로그램 개발 등 단계별로 철저히 준비하였고 수차례에 걸친 현장조사와 관계기관 회의 등 협업체계를 구축해나갔습니다.

정부법무공단 등과 이와 관련한 법적 검토를 거치고, 채권 전문기관을 방문하여 지역개발채권의 문제점과 제도개선의 가능성에 대한 조사·분석에 몰두하였습니다. 다각도의 노력을 통해 드디어 정보 관리주체의 변동 없이, 별도 서버를 구축할 필요 없이 금융기관의 기 구축된 앱 등을 통한 실시간 상환 프로그램을 개발하였습니다. 이렇게 개선된 자동상환 시스템은 채권조회 및 상환까지 1분 안에 해결 가능한 간편성과 실용성을 갖추었습니다. 무엇보다 국민이 찾아가지 못할 수 있는 채권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시·도와 협의하여 채권 발행 절차를 전면 개선하였습니다.





향후 발행되는 채권은 국민이 채권매입 5년 후 자동으로 지정된 계좌에 입금되도록 법령 개정 등 제도를 완비한 것입니다. 또한, 자동 상환시스템을 통한 자동입금 후 개인별로 문자를 발송함으로써 채권 환급금을 안내하는 시스템도 갖추었습니다. 이 같은 자동환급시스템 도입으로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재산권을 보장함으로써 국민의 관심도는 물론 큰 호응을 얻고 있으며, 유사제도를 운영하는 타 부처와 민간기업으로 확산 보급의 가능성을 높이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렇게 개선된 자동상환 시스템은 채권조회 및 상환까지 1분 안에 해결 가능한 간편성과 실용성을 갖추었습니다

### 지역개발채권 제도개선 전후

| | 개선 전 | 개선 후 |
|---|---|---|
| 만기도래 채권 | **(환급)** 은행 창구 직접 방문 | **(환급)** 직접방문+온라인 상환<br>※ 금융기관 홈페이지, 앱 |
| 신규매입 채권 | **(환급)** 채권보유 사실 망각, 은행 방문 애로 등에 따른 환급금 소멸 우려 | **(환급)** 채권보유 사실을 망각하더라도 채권 만기 도래 시 환급금 신청계좌로 자동 입금 |
| | **(안내)** 자치단체 고시·공고 | **(안내)** 만기시 개별안내 추가 |

**담당자 한마디**

**김 영 규** | 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

주요일간지 지면, 복지마블tv 등 공공유튜브 조회수 200만 건 등 주요 유튜브에 소개되었으며, 기타 유명블로그 및 공공유튜브에 수백만 건의 조회수를 기록하였습니다. 많은 분들에게 굉장히 유익한 제도라는 호평을 받게 되어 무엇보다 뿌듯하고 기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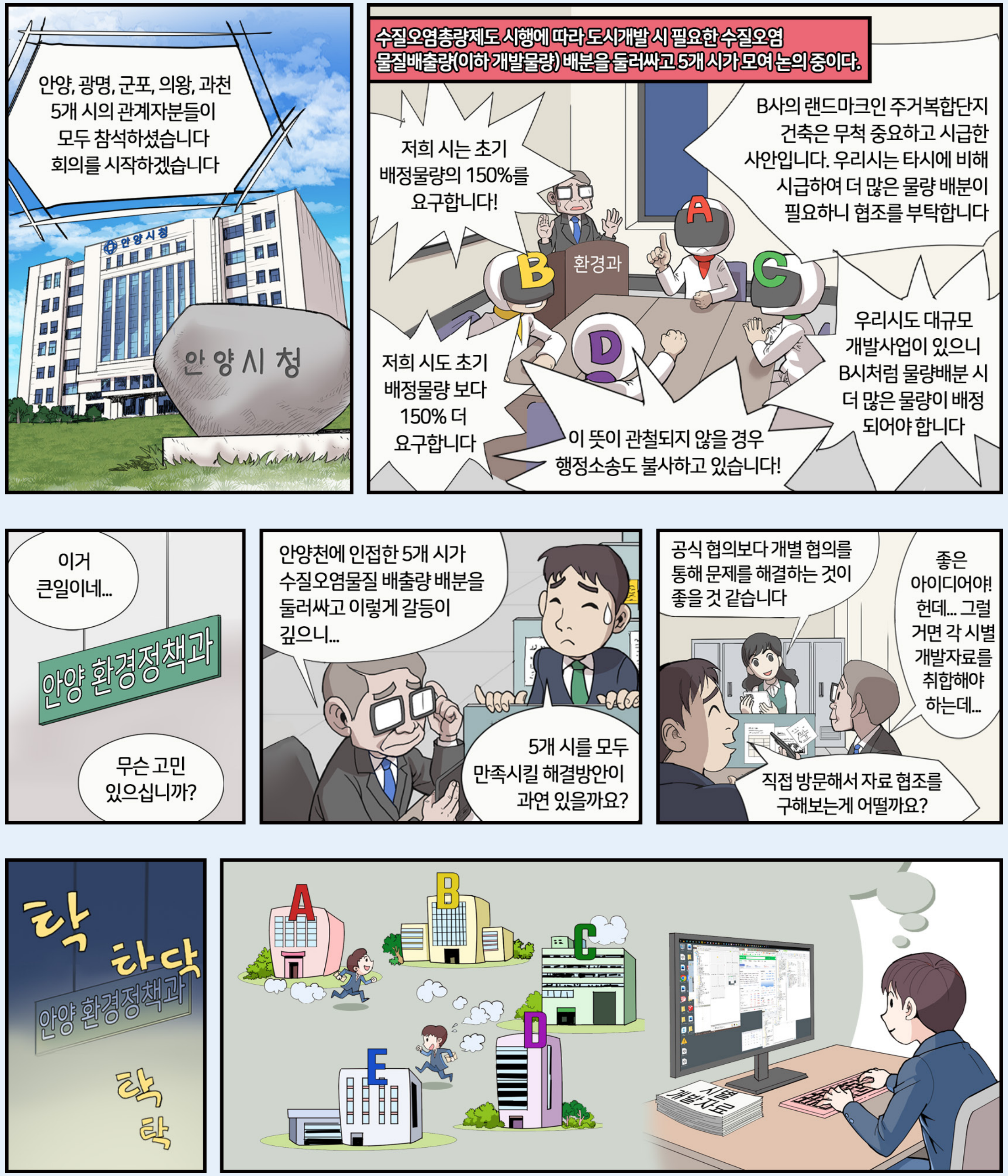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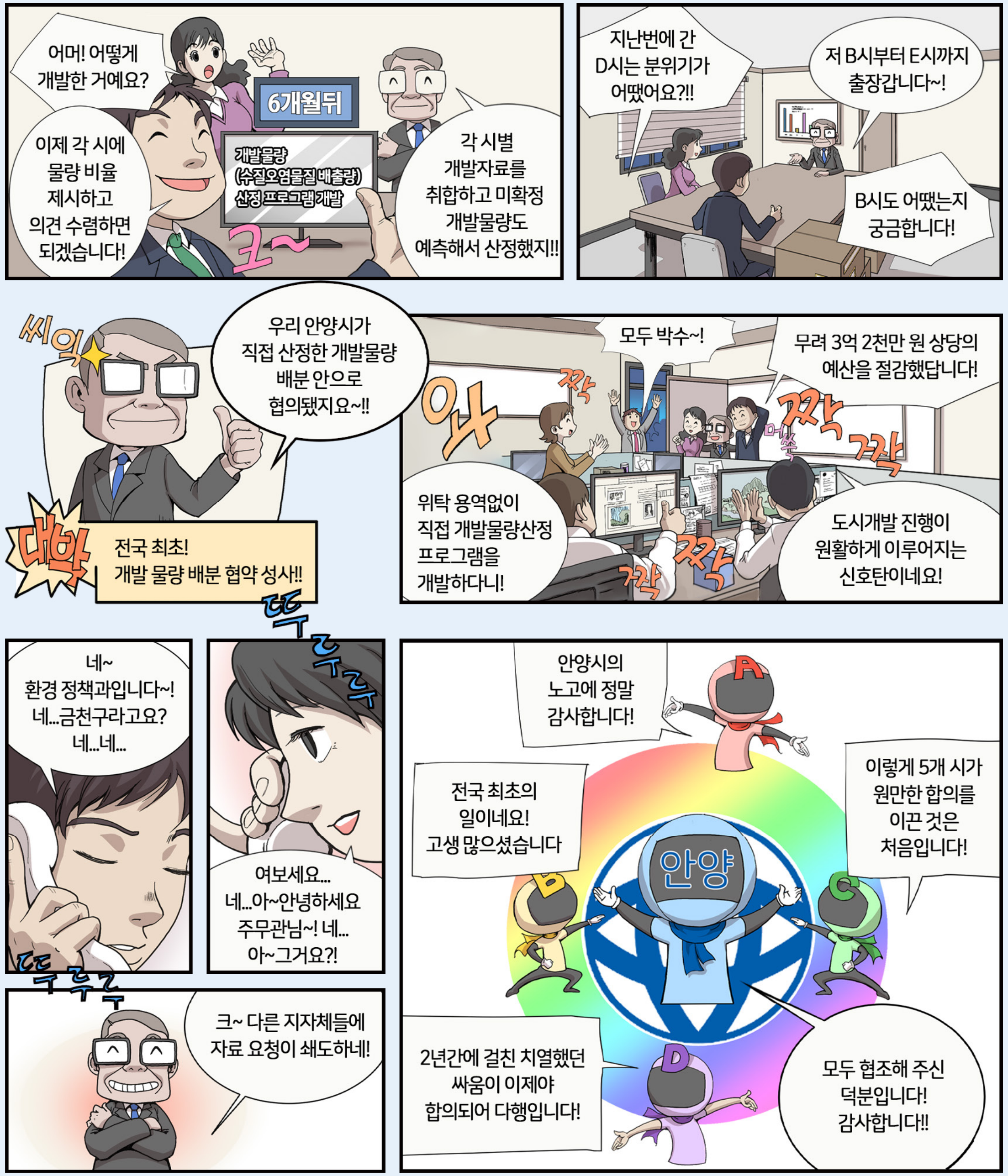
대 상
지자체 부문

# 갈등에서 협력으로, 도민과 자연이 함께 누리는 깨끗한 안양천 조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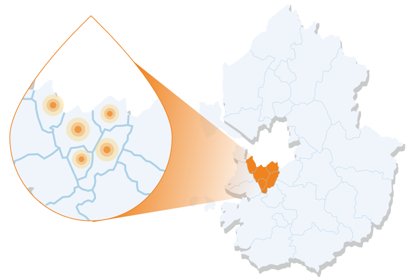
**02** 경기도 안양시

수질오염총량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도시개발을 위한 수질오염물질 배출량에 대한 배분을 둘러싸고 안양, 광명, 군포, 의왕, 과천 5개 시의 갈등이 지속되는 상황이었다. 이에 2년간 300여 회에 걸친 실무자 소통을 필두로 안양시 공무원이 직접 개발한 개발물량 산정프로그램을 활용하여 5개 시가 극적으로 행정협약을 체결했다. 오랜 갈등에 행정소송까지 이어질 뻔한 상황에 안양시의 주도로 오랜 갈등과 대립을 해결한 것이다.


안양, 광명, 군포, 의왕, 과천
5개 시의 관계자분들이
모두 참석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안양시청
안 양 시 청
수질오염총량제도 시행에 따라 도시개발 시 필요한 수질오염
물질배출량(이하 개발물량) 배분을 둘러싸고 5개 시가 모여 논의 중이다.
저희 시는 초기
배정물량의 150%를
요구합니다!
B시의 랜드마크인 주거복합단지
건축은 무척 중요하고 시급한
사안입니다. 우리시는 타시에 비해
시급하여 더 많은 물량 배분이
필요하니 협조를 부탁합니다
환경과
A
B
C
D
저희 시도 초기
배정물량 보다
150% 더
요구합니다
우리시도 대규모
개발사업이 있으니
B시처럼 물량배분 시
더 많은 물량이 배정
되어야 합니다
이 뜻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행정소송도 불사하고 있습니다!
이거
큰일이네...
안양 환경정책과
무슨 고민
있으십니까?
안양천에 인접한 5개 시가
수질오염물질 배출량 배분을
둘러싸고 이렇게 갈등이
깊으니...
5개 시를 모두
만족시킬 해결방안이
과연 있을까요?
공식 협의보다 개별 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은
아이디어야!
헌데... 그럴
거면 각 시별
개발자료를
취합해야
하는데...
직접 방문해서 자료 협조를
구해보는게 어떨까요?
탁
타닥
안양 환경정책과
탁
탁
A
B
C
D
E
시별
개발자료


어머! 어떻게
개발한 거예요?
6개월뒤
개발물량
(수질오염물질 배출량)
산정 프로그램 개발
이제 각 시에
물량 비율
제시하고
의견 수렴하면
되겠습니다!
크~
각 시별
개발자료를
취합하고 미확정
개발물량도
예측해서 산정했지!!
지난번에 간
D시는 분위기가
어땠어요?!!
저 B시부터 E시까지
출장갑니다~!
B시도 어땠는지
궁금합니다!
씨익
우리 안양시가
직접 산정한 개발물량
배분 안으로
협의됐지요~!!
대박
전국 최초!
개발 물량 배분 협약 성사!!
와
모두 박수~!
무려 3억 2천만 원 상당의
예산을 절감했답니다!
짝
짝짝
짝짝
위탁 용역없이
직접 개발물량산정
프로그램을
개발하다니!
도시개발 진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신호탄이네요!
뚜루루
네~
환경 정책과입니다~!
네...금천구라고요?
네...네...
여보세요...
네...아~안녕하세요
주무관님~! 네...
아~그거요?!
뚜루루
크~ 다른 지자체들에
자료 요청이 쇄도하네!
안양시의
노고에 정말
감사합니다!
A
전국 최초의
일이네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렇게 5개 시가
원만한 합의를
이끈 것은
처음입니다!
안양
B
C
D
2년간에 걸친 치열했던
싸움이 이제야
합의되어 다행입니다!
모두 협조해 주신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수질오염총량제로 하천구간별 목표 수질 기준하에 지자체별 개발 사업 추진을 위한 수질오염물질 배출량 확보가 중요한 사안으로 떠올랐습니다.



## 안양시 주도로 개발한 물량 산정 프로그램, 원활한 사업 추진의 기틀을 마련하다

수질오염총량제는 2013년부터 한강수계 수질오염물질의 저감을 위해 하수처리물량을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수질오염총량제로 하천구간별 목표 수질 기준하에 지자체별 개발 사업 추진을 위한 수질오염물질 배출량 확보가 중요한 사안으로 떠올랐습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을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는 지자체는 안양, 광명, 군포, 의왕, 과천까지 무려 5개 시로 배출량 확보에 대한 갈등은 2년간 이어져 왔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사업, 3기 신도시 사업 등으로 5개 시 모두 초기 배정물량의 150%를 요구하고 나섰고, 의견은 좁혀지지 않아 행정 소송으로 번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안양시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위해 각 시별 개발 자료를 취합하여 정리하고 개발물량 산정프로그램을 직접 연구, 개발하여 개발물량을 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향후 미확정 개발물량을 예측 산정하여 5개 시에 물량 비율을 제시하고 의견을 수렴한 후 물량 배분 비율을 제시하였습니다. 안양시는 이를 위해 비공식 협의를 진행하고 각 시를 수십 차례 방문하여 현장 열람을 통해 해결해나갔습니다. 이 같은 노력 끝에 안양시가 직접 산정한 물량 배분안으로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 긴 갈등을 끝내고 전국 최초로 물량 배분 협약이 성사된 것입니다.

안양시가 직접 개발한 개발물량 산정 프로그램이 가져온 성과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무려 3억 2천만 원의 예산을 절감하는 데 기여했으며, 이를 통해 5개 시의 재개발, 재건축 사업과 3시 신도시 개발 등 도민이 염원하는 지역 개발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 것입니다. 이 같은 갈등 해결 사례는 전국 광역·기초자치단체에 전파되어 환경과 개발이 상생하는 수질오염총량제의 성공적인 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담당자 한마디**

**임 동 희** | 경기도 안양시 환경정책과

유사한 갈등을 겪고 있는 남양주, 구리, 인천, 부천, 서울 자치구 등에서 안양시가 자체 개발한 프로그램을 요청하여 배포·전파하였습니다. 광명시와 시흥시 간 갈등 해결을 위한 자문회의에 참석하여 우리 안양시 노하우와 해결방안을 자문하면서 타 자치단체의 갈등 해결에 기여함에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대 상
지방공사·공단 부문

# 민·관이 함께 해결한 교통 정체, 함께 누리는 행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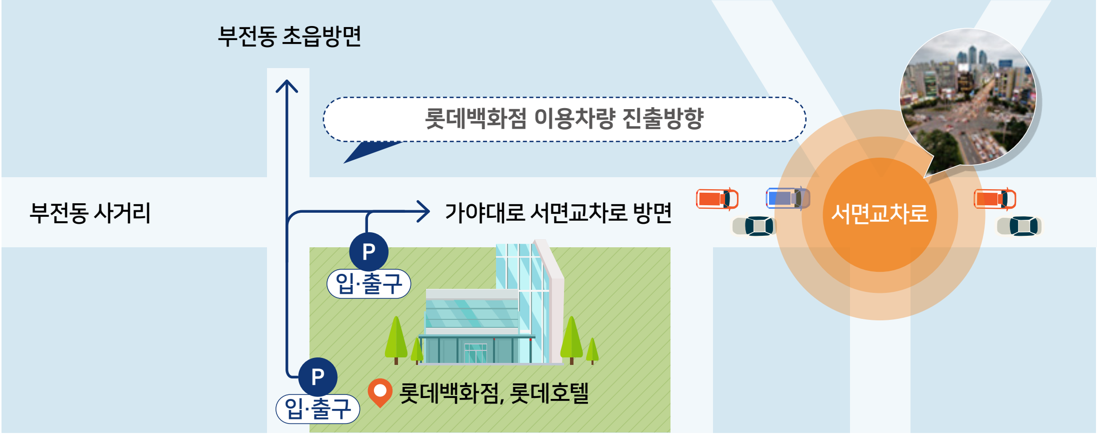
## 03 부산시설공단

부산의 중심 상권인 서면 교차로 일대는 주말, 공휴일, 저녁 시간대에 극심한 교통정체로 시민들의 불편이 지속되는 상황이었다. 이 지역은 백화점, 호텔, 상가, 식당, 카페 등이 집중되어 있는 데다 특히 백화점과 호텔 서면 교차로 방면의 차량 출차로 교통정체가 극심해 상권 위축의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었다. 이에 부산시설공단은 백화점, 상인회와 업무협약을 통해 주차 공간 확대와 입·출차 가변운영으로 상습 정체 해소를 도모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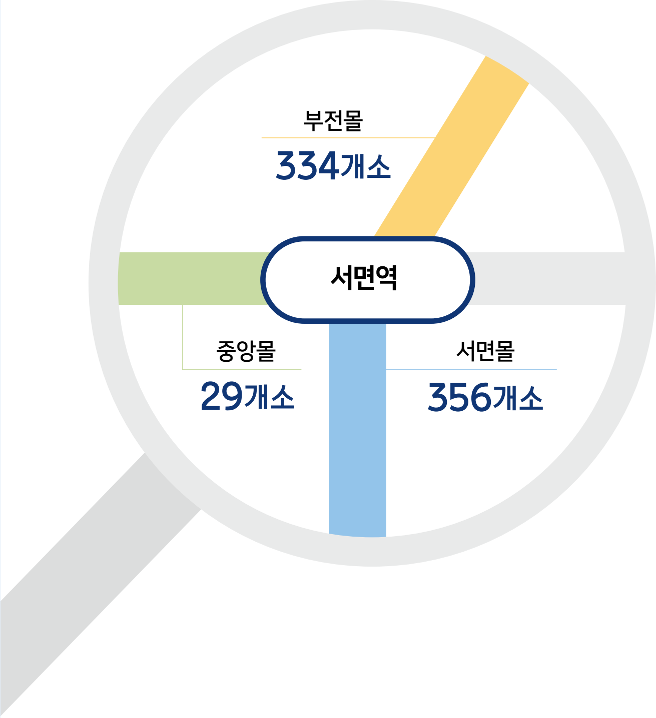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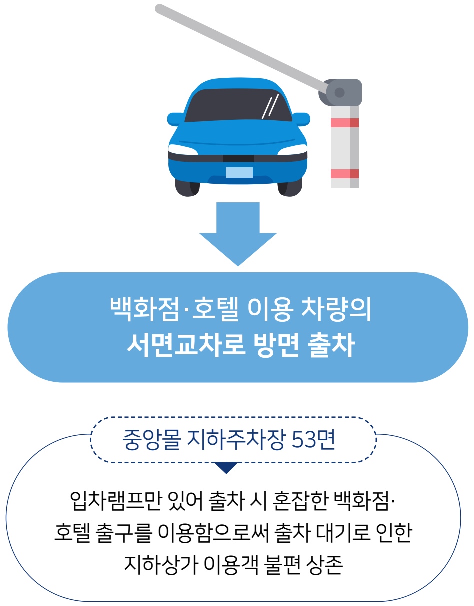
### 2022년 4월, 서면~사상 구간 BRT 공사 착공으로 교통체증 심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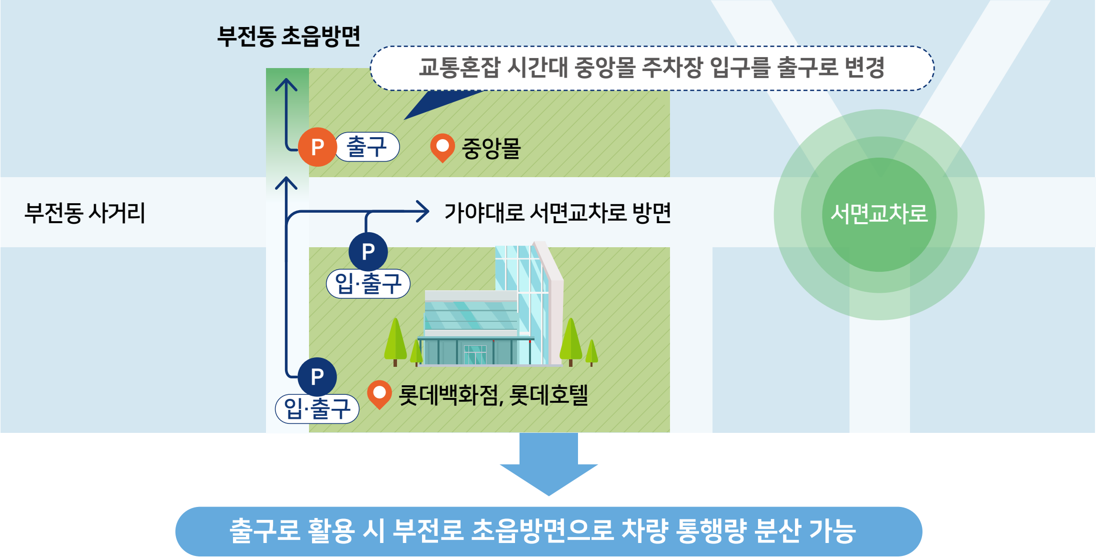

### 지하상가 상권 현황




### 교통혼잡의 주요원인



## 분산 방법




## 업무협약

2022 3월 공단 ↔ 롯데쇼핑 ↔ 중앙몰 상인회 간 업무협약 체결

| 구 분 | 주요 역할 |
|---|---|
| 공 통 | ✔ 교통영향평가 자료, 주차장 관련 정보 공유·협조 |
| 공 단 | ✔ 중앙몰 주차장 입·출차 가변운영 장소 제공<br>✔ 차단기 등 교통안전시설 전기세 등 관리비용 부담 |
| 롯데쇼핑 | ✔ 주차장 교통안전시설물(차단기, 교통신호등 등) 설치<br>✔ 가변운영 시간대 3명 이상 안전요원 배치, 민원관리<br>✔ 가변운영에 따른 사고 발생 시 민·형사상 책임(보험)<br>✔ 중앙몰 이용객 롯데백화점 무료주차 이용 혜택 제공<br>✔ 2단계 가변운영 시 중앙몰 2번 출구 캐노피(피우시설) 설치 |
| 상 인 회 | ✔ 중앙몰 주차장 가변운영 협조 |



## 가변운영

**2022년 5월 시행** (* 2022년 4월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 구 분 | 가변운영 적용 시간대 | 시행시기 |
|---|---|---|
| 1단계 | ✔ **금요일~일요일(18시~21시)**<br>*2016년 교통영향평가 활용 | 업무협약 체결 후 |
| 2단계 | ✔ 공휴일 포함(14시~20시)<br>*입·출차 가변운영 확대 | 교통영향평가 변경승인 후 |

## 통행량 분산

'22년 5~6월 평균 데이터

2022년 4월 BRT 공사 착공으로
일부 도로구간이 폐쇄됨에 따라
일대 교통체증은
심화되는 상황이었습니다.

### 상호 Win-Win할 수 있는 업무협약으로 중심 상권의 극심한 교통체증을 해소하다

부산시 부전동 사거리부터 서면교차로 일대는 서면 상권을 이용하는 차량들로 만성적인 교통정체가 발생하는 지역입니다. 2022년 4월 BRT 공사 착공으로 일부 도로구간이 폐쇄됨에 따라 일대 교통체증은 심화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서면 상권의 중심축을 담당하고 있는 지하상가, 백화점, 호텔 이용 차량의 출차 지연이 이어질 경우 이용객 불편에 따른 상권 위축의 문제 또한 배제할 수 없었습니다.

중앙몰 지하주차장의 경우 입구만 있어 출차 시 혼잡한 백화점과 호텔 출구를 사용함으로써 출차 대기로 인해 지하상가 이용객의 불편함은 더욱 가중되었고 백화점과 호텔의 경우에는 주차장 출구가 가야대로 서면교차로 방면으로 연결되어 있어 교통 혼잡으로 인한 출차 지연으로 민원 또한 잇따르고 있었습니다.

부산시설공단은 이러한 교통체증의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백화점, 호텔과 연결된 중앙몰 주차장을 활용하여 서면교차로 방면이 아닌 타 도로로 통행량을 분산하는 방안을 주도적으로 제안하였습니다. 교통혼잡 시간대에 중앙몰 주차장 입구를 출구로 변경하는 방안이었습니다. 이 경우 부전로 초읍방면으로 통행량을 분산시킬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한 것입니다. 부산시설공단은 쇼핑몰, 상인회 간 협의를 통해 교통체증 완화를 위한 해결방안의 필요성에 대해 설득하였고, 공감대를 얻어내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하지만 상인회 측은 상가 이용객의 주차 불편이 이용객 감소로 이어져 상권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또한, 특정 시간대 주차장 입·출구 가변운영으로 인한 혼란 등으로 주차장 내 차량 추돌 등 안전사고 발생에 대한 문제도 상존하는 상황이었습니다.

2022년 3월, 드디어 공단, 쇼핑몰, 상인회 간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주차장 관련 정보에 대한 공유와 협조를 바탕으로 공단은 주차장 입·출차 가변운영 장소를 제공하고, 쇼핑몰은 주차장에 교통안전시설물을 설치하며, 상인회는 중앙몰 주차장 가변운영에 적극 협조하기로 한 것입니다. 이같이 중앙몰 주차장 입·출차 가변운영으로 서면 교차로 방면으로 출차하는 차량이 감소함으로써 교통 혼잡을 해결하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었습니다. 부전로 초읍방면 통행량은 46% 이상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향후 교통영향평가 변경 승인 후 가변운영 시간을 확대할 경우 차량 통행량 분산 효과는 더욱 클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설득을 통한 공감대 형성, 그리고 상인회와 쇼핑몰의 적극적 협력으로 이루어낸 빛나는 성과입니다.



부전로 초읍방면 통행량은 46% 이상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향후 교통영향평가 변경 승인 후 가변운영 시간을 확대할 경우
차량 통행량 분산 효과는 더욱 클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담당자 한마디**

**김 윤 현** | 부산시설공단 상가기획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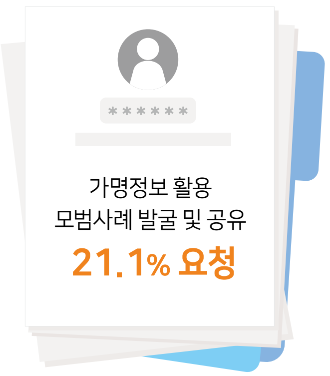
상인회 측은 중앙몰 이용객의 백화점 주차장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준 상권 활성화 지원에 감사함을 표했고, 쇼핑몰은 아이디어 제안에 감사 인사를 전하는 한편 적극적인 협력을 약속하였습니다. 민·관 협력으로 상생은 물론 시민 불편을 해소할 수 있어 뜻깊은 업무로 기억될 것 같습니다.

# 개인정보를 보다 안전하고 유용하게.
# 국민의 삶을 보다 편하고 유익하게.

## 04 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0년 8월, 디지털 전환 시대에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해 양질의 데이터를 안전하게 활용하고자 가명정보 제도를 도입하였다. 이는 개인정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삭제·대체하여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한 것으로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활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를 통해 그간 활용이 불가능했던 빅데이터와 AI를 통한 데이터 분석이 가능하며 다양한 이종 산업 간 데이터를 서로 연계함으로써 새로운 데이터 부가가치 창출도 가능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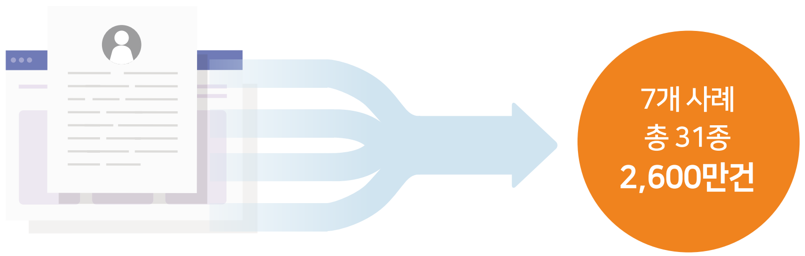
### 2021년 가명정보 활용실태 및 수요조사




### TF 구성·운영으로 실무협의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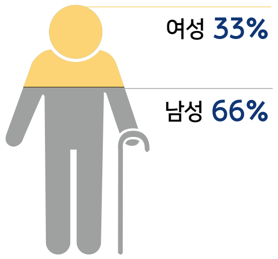
- 2020년: 7회
- 2021년: 103회 (7개 분과, 14개 기관)
- 2022년: 10회 (4개 분과, 17개 기관)

### 1기 가명정보 결합 시범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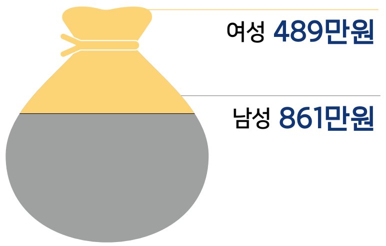



### 국민 노후소득보장 분석 노인층 65세 이상

연금수급률 **4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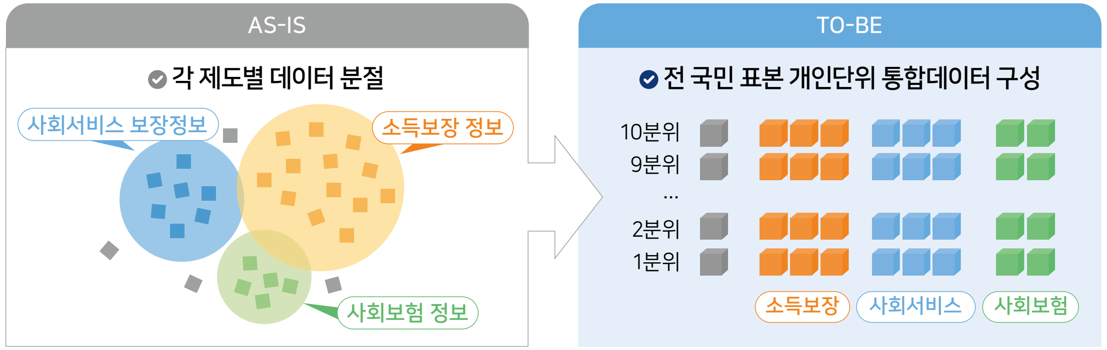



연금수급액 **710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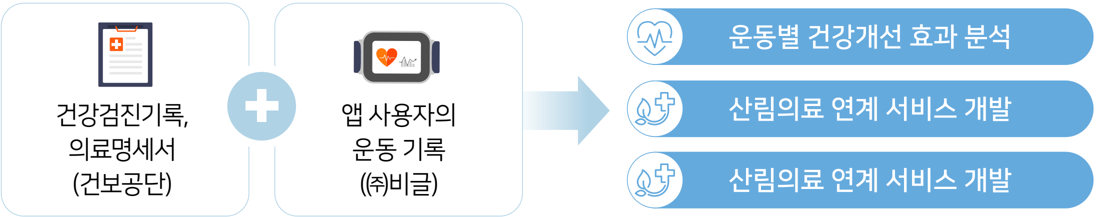

역대 최대 규모 데이터 결합으로 **노후소득보장 실태 파악 340만명, 18개 기관**

### 가명정보 결합을 통한 노후소득보장 분석 기대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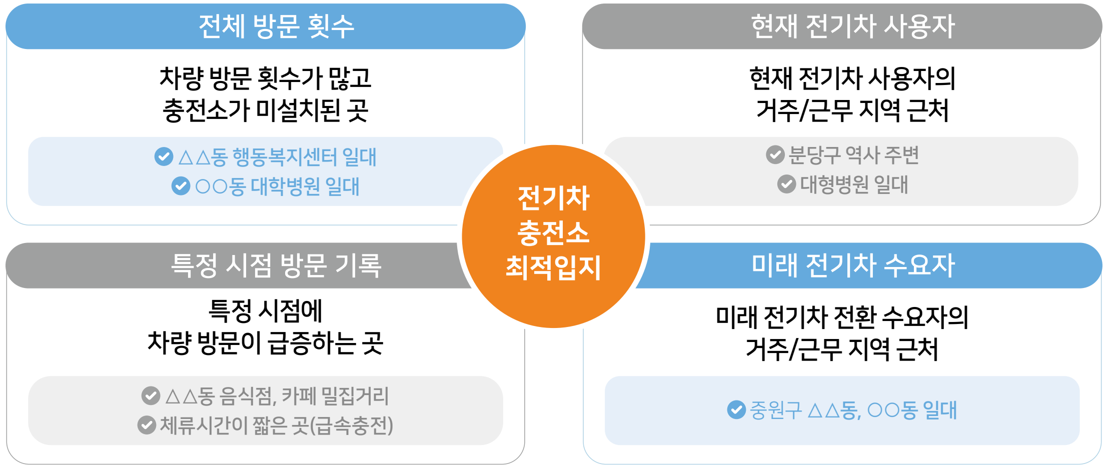



### 가명정보 결합을 통한 맞춤형 의료치료 프로그램 개발 계획

*원고 2,3번 중복 확인요청




### 전기차 충전시설 최적입지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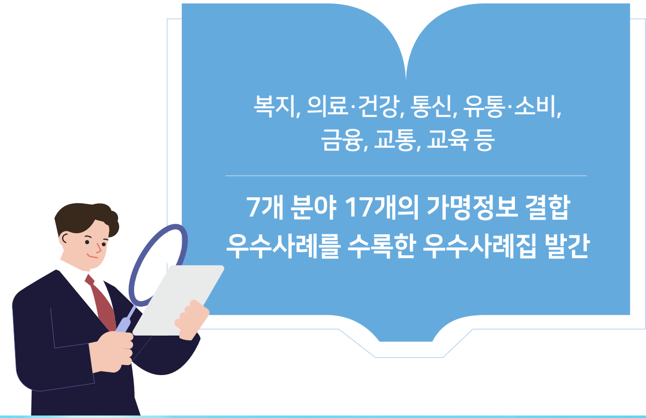



### 가명정보 활용 우수사례 경진대회 개최

**시상 : 13건** (장관상 5건, 우수상 8건)

개최: 개인정보위, 과기정통부, 금융위원회, 보건복지부 공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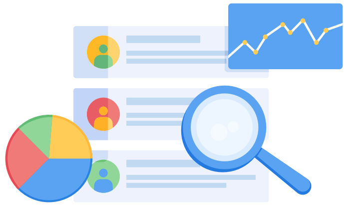
### 2021 가명정보 활용 우수사례집 발간



「가명정보 활용 우수사례집」 발간

가명정보 활용 우수사례 경진대회 개최('21.11.16.)

가명정보 제도 도입으로
통계 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의 목적에 한하여
안전하게 가명 처리한 후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정보 활용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 디지털 전환 시대, 데이터 경제 활성화로 국민 삶의 질을 높이다

가명정보 제도 도입으로 통계 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의 목적에 한하여 안전하게 가명 처리한 후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정보 활용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같이 제도의 법적 기반은 마련되었지만 아직 제도 도입 초기 단계로 가명정보 제도의 효용을 알 수 있는 현장의 활용사례가 부족하여 본격적인 제도 활용 경험이 적고 인식 확산 또한 미진한 상황입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신속한 가명정보 활용사례 발굴을 위해 수요조사와 컨설팅에 착수하였습니다. 또한, 국민들이 쉽게 체감할 수 있는 선도사례를 구체화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판단하고 관계부처, 데이터 보유기관, 결합전문기관, 유관기관 간 유기적인 협의 추진에 나섰습니다. 이에 TF를 구성하여 지속적인 실무협의를 지원하고 관련 법령을 비롯하여 가이드라인의 적극적 해석을 통해 모호성을 해소해나갔습니다. 그리고 가명정보 결합 선도사례로 도출된 성과를 공유하기 위해 보도자료 배포를 비롯하여 '가명정보 활용 우수사례집'을 제작하고, 카드뉴스 배포, SNS 홍보 등 가명정보 결합의 성과에 대해 적극 홍보에 나섰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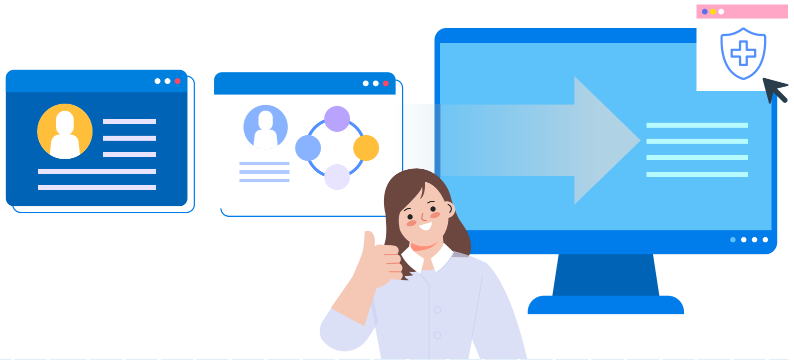
1기 가명정보 결합 시범사례는 총 7개의 사례로 총 31종 2,600만 건의 데이터를 결합하였습니다. 그 중 '국민 노후소득보장 분석' 사례는 340만 명, 18개 기관의 데이터 결합을 통해 노후소득보장 실태 파악에 나선 것입니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두 번째 사례는 '운동활동별 건강개선 효과 분석'입니다. 건강보험정보와 운동분석 데이터 결합을 통해 운동별 건강개선 효과를 분석했습니다. 이를 통해 등산운동이 체중·체질량·허리둘레 감소 등 다이어트에 가장 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령이 높아질수록 등산을 많이 하고, 뛰기 운동의 비율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운동빈도가 증가할수록 입·내원, 총의료비 등 국민 의료부담이 감소한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같은 가명정보 결합을 통해 운동별 건강개선 효과 분석, 산림의료 연계 서비스 개발 등 맞춤형 의료치료 프로그램 개발 계획에 착수하였습니다.

성남시의 차량정보와 티맵의
차량운행정보를 결합함으로써
개별 데이터만으로는 파악이 어려웠던
충전소 최적 입지 선정모델을 개발,
성남시 내 총 60여 곳의
지역이 최적입지로 추천되었습니다.

2기 가명정보 결합 선도사례는 국민체감 4대 분야, 17개 기관이 참여하였으며, 대표적으로 '친환경차 충전 인프라 수요예측 및 최적입지 선정'에 대해 분석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성남시의 차량정보와 티맵의 차량운행정보를 결합함으로써 개별 데이터만으로는 파악이 어려웠던 충전소 최적 입지 선정모델을 개발, 성남시 내 총 60여 곳의 지역이 최적입지로 추천되었습니다.

이 같은 가명정보 활용의 효용성을 더욱 높이고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과기정통부, 금융위원회, 보건복지부와 공동으로 가명정보 활용 우수사례 경진대회 개최를 통해 우수사례와 아이디어를 발굴하여 제도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현장에 참고사례로 사용될 수 있도록 매년 우수사례집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가명정보 제도의 활성화를 통해 국민이 보다 더욱 편하고 유익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담당자 한마디**

**주 문 호**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데이터안전정책과

가명정보 제도의 활용 활성화를 위해 관계기관·부처 합동으로 적극적인 가명정보 활용사례 발굴, 성과발표 및 홍보를 통해 국민인식을 제고하였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실제 기관 간 120회 이상의 실무협의를 주도하며 총 29개 기관, 31종 2,600만여 개의 데이터를 가명처리·결합하여 국민체감 선도사례를 창출하였습니다.





최우수상
중앙 부문

# 한 장의 교통카드로 전국의 대중교통을 편리하게 이용하다.

**05 국가보훈처**

국가에서는 몸이 불편한 상이유공자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버스와 지하철을 무임으로 이용할 수 있는 교통복지카드를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지역별·교통수단별 호환이 되지 않는 불편함이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었다. 국가보훈처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에 걸쳐 교통복지카드 전국 호환 시스템을 구축해 275만 명의 유공자와 장애인들의 이동권을 개선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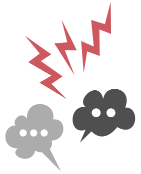
전국 호환 시스템은 이런 불편함을 개선한 것으로
한 장의 교통카드로 17개 시·도 전국의 버스와 지하철을
무임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 Q 대중교통을 무임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전국 호환 시스템에 대해 설명해주세요.

교통복지카드는 몸이 불편한 상이유공자와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지급되는 카드입니다. 하지만 교통복지카드는 거주지역에 국한해서 사용하고, 타 시·도로 이동할 경우 요금이 부과되는데 이때 무임대상 신분증을 제시해야 합니다. 전국 호환 시스템은 이런 불편함을 개선한 것으로 한 장의 교통카드로 17개 시·도 전국의 버스와 지하철을 무임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 Q 그간 교통복지카드 이용에 있어서 어떤 문제점이 있었나요?

타 시·도로 이동할 때 버스의 경우 상이군경회원증, 수송시설이용증서 등을 제시해야 하며 지하철의 경우는 국가유공자증 및 장애인증을 활용해 역사 내 우대권발권기에서 승차권을 발권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불편함은 물론 버스 기사와 마찰이 빈번하게 발생하였고, 신분증을 제시하고 버스를 탑승하기 때문에 정확한 감면이용액 산출이 불가능해 버스운송조합연합회와 할인 이용 계약 시 감면액에 대한 이견으로 계약이 지연되는 사례가 매년 발생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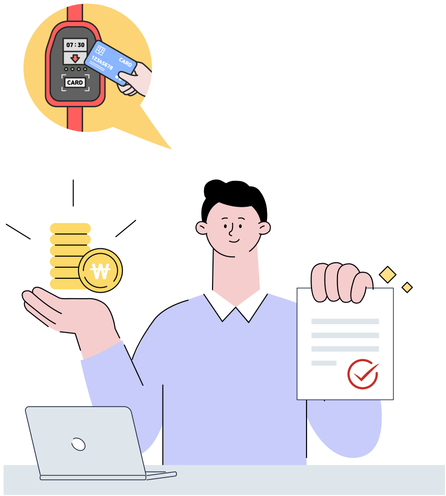


### Q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교통카드 전국 호환 추진은 2013년에 완료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1996년 교통카드시스템 구축에 대해 정부에서의 방향성과 표준규격이 없어 지역별로 교통카드가 도입됐습니다. 하지만 지역에 국한해 이용할 수 있는 점이 불편해 국토부 주관으로 전 국민을 대상으로 교통카드 전국 호환 추진이 완료되고 도시철도가 있는 지자체 주관으로 교통복지카드 무임 사용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러나 2016년 광주시 등 6개 광역시만 지자체 주관으로 도입되어 교통복지카드를 도입하지 않은 지역과 전국 호환이 안 되는 사각지대가 존재했습니다.

### Q 전국 호환 시스템 구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은 없었는지요.

지하철 무임 손실 부담 해소를 요구하는 지자체의 협의와 시스템 개선 예산확보가 불가해 사업추진이 중단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으로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었습니다. 결국 교통복지카드를 전국적으로 도입하고 호환하여 무임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어느 한 지자체에서 추진하기 어렵고 국가사업으로 추진해야 하지만 관련 예산확보가 관건이었습니다. 특히 도시철도 국비보전이 안 되는 상황에서 타 시·도 거주자가 해당 지역 도시철도를 무임승차하는 것에 대한 반대로 지자체 등과 합의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Q 추진 과정에서의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해나가셨나요?**

국가사업으로 추진이 불가피하지만 많은 예산이 수반되고 통상 신규 사업은 예산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죠. 이에 국민참여예산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했습니다. 이렇게 예산을 확보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에 걸친 장기 미해결 관제를 완수할 수 있게 된 것이죠.

**Q 지자체와의 협의는 어떻게 이끌어내셨는지요.**

지자체에 도시철도 무임 이용에 대한 국비 보전이 안 되는 상황으로 그간 호환을 반대해왔던 지자체의 협조가 절실한 상황이었습니다. 2020년 9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2단계에 걸쳐 5대 광역 시·도와 도시철도공사 등 10개 기관을 방문해 사업 추진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천신만고 끝에 전국 호환 추진 합의를 극적으로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Q 전국 호환 시스템은 어떤 방식으로 구축되었나요?**

지역별, 교통사업자별, 교통수단별로 달리 구축된 교통복지카드 사양을 표준화하고 승차 단말기 소프트웨어를 개선해 교통복지카드가 전국 버스와 지하철 단말기에서 무임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개발했습니다. 이에 교통복지카드를 승차 단말기에 태그한 후 바로 탑승이 가능하게 된 것이죠.

**Q 교통복지카드 전국 호환 시스템 구축으로 어떤 성과가 나타나고 있는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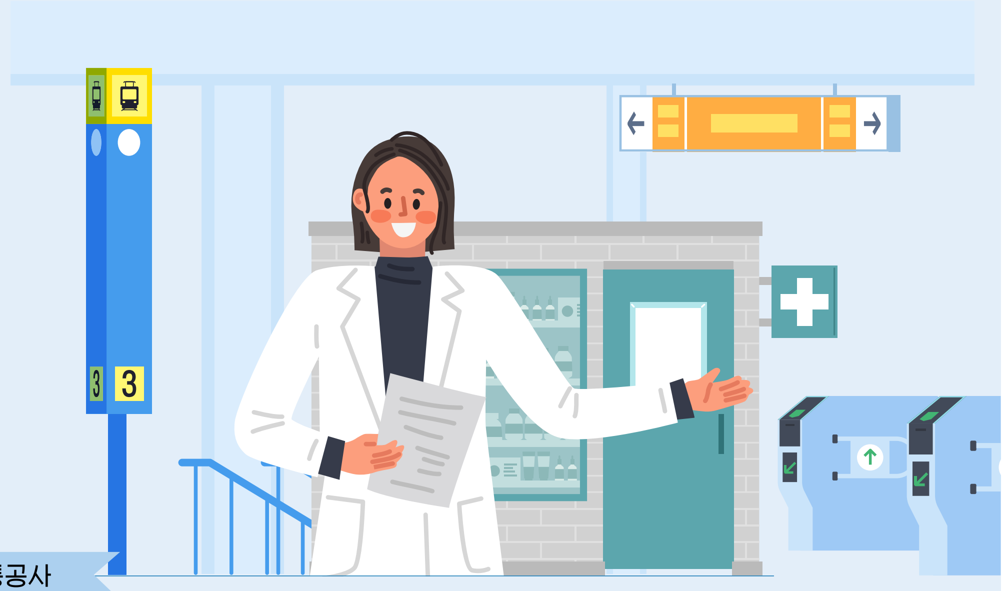
무엇보다 범부처 민원과 개선사항을 반영해 국가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성과를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확한 교통 이용량 산출로 사업방식을 변경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함으로써 합리적으로 정확한 국고보조금을 지급하고 지속적으로 안정적인 감면정책을 운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담당자 한마디**

**김 미 현** | 국가보훈처 복지정책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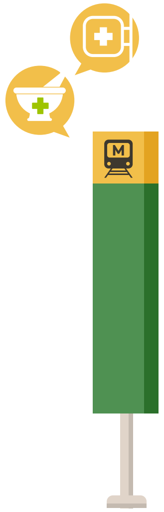
서울에 가려면 여러 신분증 지참이 번거로웠으나 카드 한 장으로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해줘서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싶어 전화를 하셨다는 유공자분의 한마디에 그동안 사업을 추진하면서 겪었던 많은 역경이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앞으로도 유공자 교통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겠습니다.

# 아플 땐 지하철을 방문하세요.
# 국민 건강 서비스, 행복 서비스




**06** 서울교통공사

건축물 관리 대장이 부재하다는 이유로 보건소가 지하철 역사 내 약국 개설 신고 수리를 거부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지하철역은 도시철도법으로 설립된 건축물이지만 지하역사는 건축법에 적용되지 않아 건축물 대장에 등재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서울교통공사는 이를 불필요한 행정 규제로 판단하고 행정규제와 관련한 사전컨설팅 의뢰를 시작으로 다각도의 노력 끝에 지하철 역사 내 약국 개설 근거를 마련하는 데 성공했다.




**2017. 9. 27.**
국무조정실 규제개혁단
- 의원 개설 행정규제 완화 논의

**2017. 11. 24.**
국토부-서울시-공사 간
규제개혁 해법 논의

**2018. 9. 3.**
국토부 주관
'역 시설 적정관리 법제개선 연구'
합동 논의

**2019. 8.19.**
7호선 강남구청역
의원·약국 개설 거부

**2019. 12. 20.**
의원 약국 개설 행정규제 관련
사전컨설팅 의뢰

**2020. 7. 15.**
감사원 컨설팅 결과 통보

**2020. 12. 15.**
국토교통부 고시 제정

**2021. 5. 25.**
서울시 행정심판 인용재결
⇒ '의원' 신고수리

**2021. 9. 23.**
강남구청역 의원 개설
⇒ 규제 개혁 이후 최초 개원

**2022. 1. 24.**
메디컬존 <역삼역, 종로3가(3)역> 계약 체결
- 1역사 내 의원 약국 동시 입점

**2022. 7. 29.**
국토부 주관
'도시철도법령 법제개선 연구' 합동 논의

드디어 2020년 12월 15일,
'도시철도 역사 내 편의시설 설치 및 운영규정' 이
제정됨으로써 '도시철도 역사 내 편의시설 관리 대장'을
구비했을 경우 약국 개설 근거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 시민의 교통수단 지하철, 이동부터 건강 서비스까지 실현하다

지하철 역사는 안전시설, 부설주차장, 조경면적 등 건축법령상 기준과 달라 구청에서 건축물 대장 생성에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2019년 8월, 7호선 강남구청역에 의원·약국 개설을 신청했으나 거부당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2016년 10월, 6호선 DMC역에 의원·약국이 개설되었으나 은평구청에서는 지하철 역사를 건축법 적용이 제외된다고 해석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자치구마다 상이한 법 해석으로 다른 행정처분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서울교통공사는 이 같은 규제는 불필요한 것으로 판단하였으나, 문제 해결을 위해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으로 국토교통부 등 유관부서를 설득하는 데 어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 2019년 12월 의원·약국 개설과 관련한 행정규제에 대해 사전컨설팅을 의뢰하였습니다. 하지만 2020년 7월, 감사원 컨설팅 결과 건축물 대장 미등재를 사유로 의원·약국 개설 등록 신청 수리 거부는 부당하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감사원의 컨설팅 결과를 통해 '적극행정 적용대상'임을 인정받은 것입니다. 드디어 2020년 12월 15일, '도시철도 역사 내 편의시설 설치 및 운영규정'이 제정됨으로써 '도시철도 역사 내 편의시설 관리 대장'을 구비했을 경우 약국 개설이 가능하다는 근거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서울교통공사의 이 같은 적극행정을 통해 2021년 9월, 강남구청역에 의원이 개설되었습니다. 이는 규제 개혁 이후 최초의 개원이었습니다.

이어 2022년 1월에는 역삼역과 종로3가역 메디컬 존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1역사 내 의원과 약국이 동시에 입점할 수 있었습니다.

규제개혁을 통해 지하철 역사에 본격적으로 의원과 약국을 유치할 수 있게 되었고, 메디컬 존 사업으로 확대하여 추진하게 되면서 임대수익 증대와 시민편의를 동시에 증진하는 데 기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입점에 그치지 않고 메디컬 존은 평일 저녁과 주말에 운영함으로써 시민생활 편의를 높이는 데 큰 몫을 해내고 있습니다. 이제 지하철은 시민의 교통수단뿐 아니라 국민의 건강 서비스까지 책임지는 든든한 울타리가 되고 있습니다.

**담당자 한마디**

**김 혜 성** | 서울교통공사 부대사업처

지하철 역사 건축물 대장 부재를 사유로 보건소에서 개설 수리를 거부한 '의원 및 약국'에 대한 불필요한 행정 규제를 해소함으로써 본격적으로 역사 내 메디컬 존 유치가 가능하게 되어 지하철이 수송뿐 아니라 시민 건강까지 책임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최우수상
지방공사·공단 부문

# 강릉의 안심 여행 서비스 “해피하게 오감” 프로젝트

**07** 강릉관광개발공사

강릉은 매년 방문 관광객의 수가 점차 증가하는 만큼 동해안의 대표 관광지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강릉 관광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개선해야 할 과제가 몇 가지 있었습니다. 먼저, 여름 성수기 등 특정 시기에 숙박업소의 일명 바가지요금으로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을 해결해야 했습니다. 또한, 코로나19 팬데믹 시기, 방역과 안전에 대한 불안감으로 인해 여행객 수가 감소하고, 관광산업의 침체로 중소형 숙박업체의 경제적 타격을 입고 있었으며, 마지막으로 강릉 주요 관광지 주변에 관광안내센터가 없어 관광객의 불편함이 발생하는 문제 또한 간과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에 강릉관광개발공사(강릉DMO)는 관광객에게 어디서나 편리하게 관광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플랫폼 운영과 지역관광 품질 개선을 위한 방안 마련에 나섰습니다.

먼저 강릉시 숙박시설의 바가지요금 근절을 위해 사계절 요금표를 제시하는 ‘해피요금 인증서비스’를 통해 관광객들에게 신뢰감을 형성하며 강릉 관광경제에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관광객이 오고 가면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카페와 음식점을 대상으로 관광정보를 제공하는 안내시설을 설치하는 동시에 휴게공간을 제공하는 ‘오감안내소’ 조성을 착안하였습니다. 해피요금 인증과 더불어 오감안내소를 연계하여 시설 및 코로나19로 인한 안전불감증을 해소함으로써 안전하게 여행할 수 있는 ‘안심여행 인증서비스’ 마련에도 나섰습니다.

숙박업소를 방문해 설득 끝에 50개소를 선정하고
해피요금 인증 및 바가지요금 근절,
친절 캠페인을 실시했습니다.

## 지역관광 거버넌스 구축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 도모에 나서다

해피요금 인증서비스 사업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숙박업소의 적극적인 참여가 중요한 사안이었지만 사업 초기 숙박업소의 반응은 예상을 빗나갔습니다. 계절과 휴일로 인한 성수기 변동요인이 있는 요금을 공지하는 문제에 대해 반발했고, 사업 참여에 의구심을 품는 등 해피요금 인증업소 선정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오감안내소 설치 문제 또한 녹록지 않았습니다. 20개소가 넘는 업소에 지속적인 방문을 통해 참여를 독려했지만 관광홍보물 배치와 시설관리에 어려움이 있었고, 다수의 시설을 확보했음에도 관광객의 기대 수준에는 미치지 못할 정도로 안내소가 부족했던 것입니다. 또한, 홍보가 부족해 업체들이 사업에 참여했음에도 효과가 미비한 것 같다는 불만 사항이 쇄도하였습니다. 해피요금 인증 업체와 오감안내소 업체 중 자체적 시설점검과 방역을 시행하고 있어 영업시간에 방해되는 인증서비스 사업에 참여하고 싶지 않다는 이유 등으로 사업 동참에 난색을 표명하기도 했습니다.

강릉관광개발공사(강릉DMO)는 강릉관광발전협의회, 대한숙박협회, 농어촌 민박협회의 관광발전 거버넌스 구축을 통해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였습니다. 그리고 숙박업소를 방문해 설득 끝에 50개소를 선정하고 해피요금 인증 및 바가지요금 근절, 친절 캠페인을 실시했습니다. 또한, 오감안내소 전용 관리와 관광객 안내서비스를 위해 관광우체부를 고용하여 효율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해나갔습니다. SNS를 활용한 대대적인 홍보는 물론, 참여 업체에 인증명패를 제공하고, 방역·정기안전점검 서비스 지원, 설문조사를 통해 선정한 방역키트와 소독물티슈를 전 업체에 제공하였습니다.





## 친절 서비스! 신뢰할 수 있는 강릉 만들기

해피요금 인증서비스 사업을 시작으로 구축된 거버넌스 협의체에서 '친절 서비스! 신뢰할 수 있는 강릉 만들기'를 구호로 강릉 관광 활성화를 위한 자발적 캠페인을 실시하였습니다. 76개 사업체를 대상으로 해피 요금 인증서비스 사업을 시행한 결과 관광객에게 신뢰감을 형성함으로써 전년 대비 객실 가동률은 10%, 매출액은 15%가 증가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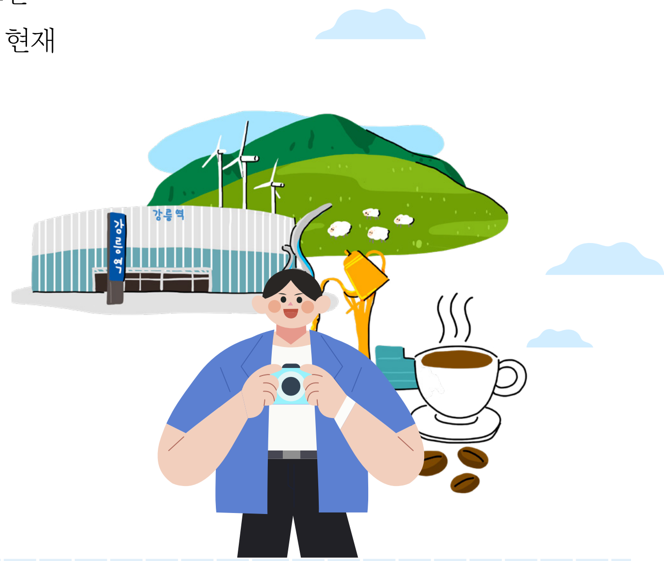
해피요금인증 업소와 오감안내소 방문 관광객 대상 설문조사 실시 결과 안심관광지 서비스 제공과 강릉 관광시설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재방문 의사는 무려 97.9%를 차지했습니다. 관광우체부 채용으로 일자리 창출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함은 물론, 청년 고용을 통해 사업계 관계자들과 긴밀한 소통 창구를 마련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안심관광지 서비스 제공과
강릉 관광시설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재방문 의사는
무려 97.9%를 차지했습니다.

커피축제, 단오제 등 강릉 대표 지역축제에서 오감안내소 홍보 부스를 운영함으로써 총 2천여 명이 넘는 관광객이 부스를 방문하면서 오감안내소를 알리는 계기를 마련하였고, 이에 다양한 관광 정보를 제공하였습니다.

최초 20개소 설치를 목표로 시작했던 오감안내소는 관광객에서 효율적인 정보제공으로 좋은 반응을 이끌어냈고, 오감안내소 설치를 희망하는 사업체들의 요구에 따라 2021년 ~ 2022년 지속적인 신규 업체 선정을 통해 현재 33개소에 이르고 있습니다.

아울러 한국관광공사에서 사업비를 지원받아 ESG 연계 디지털 트렌스포메이션을 활용한 '스마트 오감안내소' e-홍보물(키오스크) 제작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타 기관과의 지속적인 협업방안 모색을 통해 '해피하게, 오감' 프로젝트의 활성화 및 강릉 관광 발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담당자 한마디**

**최 경 호** | 강릉관광개발공사 관광사업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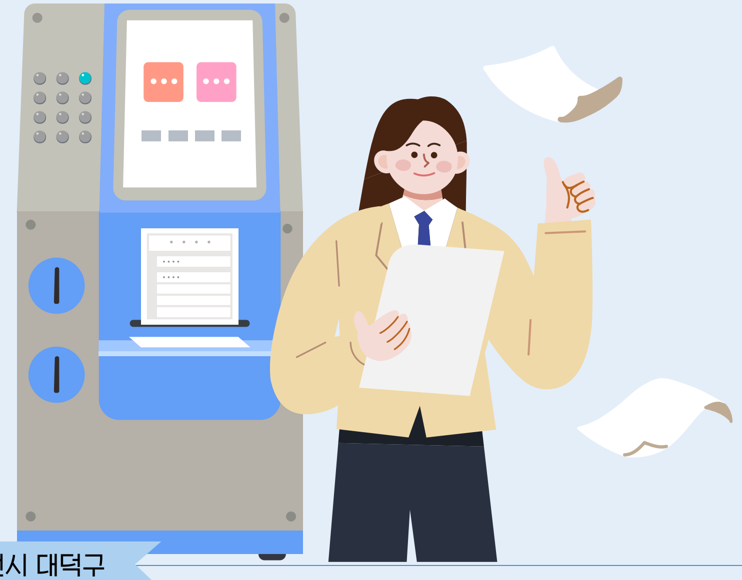
'해피하게, 오감' 프로젝트의 지속 발전을 위해 ESG 연계 디지털 트렌스포메이션을 활용한 '스마트 오감안내소' e-홍보물(키오스크) 제작을 진행하고 있으며 타 기관과의 협업방안 모색을 통해 '해피하게, 오감' 프로젝트의 활성화 및 강릉 관광 발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수상
지자체 부문

# 지방세 납세증명서도 무인민원발급기에서?
# 국민 불편 해소·국민 편익 증진



**08** 대전시 대덕구

은행 업무 처리를 위해 국세 납세증명서를 발급받는 민원인 대부분이 지방세 납세증명서도 필요하지만 무인민원발급기에서는 국세 납세증명서만 발급이 가능하다. 민원인은 지방세 납세증명서 발급을 위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증명서 발급 공무원은 업무가 가중되는 문제가 제기되는 상황이었다. 대전시 대덕구는 중앙부처에 수년간 적극적으로 건의한 끝에 전국 무인민원발급기에서 지방세 납세증명서 발급이 가능하도록 이끌었다.

**2019. 7.**
비래동 행정복지센터
무인민원발급기 업무담당자로서
문제점 최초 인지

**2019. 10.**
지방세 납세증명서 발급이 되지 않는
정책적 사유가 있는지 세무과에 문의
→ 특별한 사유 없음 의견

**2020. 4.**
행안부 지방규제혁신과 주관
민생규제 혁신과제로
대덕구에서 1차 건의

**2021. 8.**
행안부 '수용' 통보

**2021. 8.**
4차, 중소기업 옴부즈만
에 규제애로 신고

**2021. 4.**
지자체 건의과제로
행안부에 3차 건의

**2021. 4.**
보완 논리 개발 및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민생규제 혁신과제로
2차 건의

**2021. 9.**
대전 대덕구 건의로 '무인민원발급창구에서도
지방세 납세증명서가 발급된다'는
보도자료를 행안부가 언론에 배포

**2021. 11. 1.**
「무인민원발급창구를 이용하여 접수·처리할
수 있는 민원사항의 종류」(행정안전부 고시 제
2021-71호, 2021.11.1., 일부개정)

**2021. 12.**
중소기업 옴부즈만으로부터
발급이 가능해졌다는
뒤늦은 답변 회신

**2021. 11. ~ 2022. 2.**
4개월간 전국 무인민원발급기에서
지방세 납세증명서 발급건수
자료 수신

**2021. 3.**
행안부
민원제도혁신과에 질의

### 굳건한 개선 의지로 굳게 닫힌 문을 열다

지방세 납세증명서는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발급받거나 PC로 '정부24'에 접속해 공동인증서 인증을 통해 지방세 납세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만약 프린터가 없는 경우에는 무인민원발급기에서 지문 인식으로 인증을 마쳐야 하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습니다. 이같이 민원인의 불편함과 불합리함을 개선하고자 대덕구는 세무과에 지방세 납세증명서가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되지 않는 정책적 사유가 무엇인지 문의하였습니다. 하지만 특별한 사유가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이 문제를 행안부 지방규제혁신과 주관 민생규제혁신과제로 1차 건의하였지만 결국 회신은 없었습니다.

이번에는 행정복지센터 민원실 담당자에게 문의를 통해 개선되지 않은 점을 확인한 후 보완 논리를 개발하고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민생규제 혁신과제로 2차 건의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회신은 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지자체 건의과제로 행안부에 3차 건의를 시도하였습니다. 그리고 4개월 만에 행안부로부터 '수용' 통보를 받았습니다. 행안부로부터 수

세무과 상담을 통해 발급이
불가한 점에 대해
정책적 사유를 확인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용 통보를 받기 전에는 4차로 중소기업 옴부즈만에 규제애로 사항으로 신고하였고, 무인민원발급이 가능해진 후 뒤늦은 답변을 회신받기도 했습니다.

드디어 2021년 11월 1일, '무인민원발급창구를 이용하여 접수 처리할 수 있는 민원사항의 종류(행정안전부 고시 제2021-71호, 2021.11.1., 일부개정)' 민원사항에 지방세 납세증명서가 추가되었습니다. 그리고 2021년 11월 12일부터 전국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전국 국민들이 무인민원발급기에서 국세 납세증명서와 지방세 납세증명서를 동시에, 손쉽게 발급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4개월간 전국 무인민원발급기에서 지방세 납세증명서 발급 건수를 조사해보니 약 4개월 만에 176,000명의 국민이 이용했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얻었습니다.

지자체 민원실 공무원이 민원인과 대면 근무를 통해 불편사항을 인지해도 그것을 사례로 발굴하여 중앙부처에 건의하는 방법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자체 민원실 근무는 대체로 경력이 적은 공무원이 담당하는 경우가 많고, 민원인의 불편사항을 인지해도 그것이 불합리한 중앙부처 법령에 기인한 것인지 법률전문가가 아닌 이상 확신을 가지고 건의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다른





동 민원실 담당자를 비롯해 세무과 상담을 통해 발급이 불가한 점에 대해 정책적 사유를 확인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무인민원발급 시행으로 176,000명이 수혜를 입었으며, 1인당 10분의 시간 소요를 가정할 때 이는 시간가치로 1,760,040분, 근로 시간 임금 총액으로 5억 6천 6백여 만 원에 달하는 가치입니다. 이는 구민과 대면하는 접점인 행정복지센터의 증명서 발급 담당자로서 구민의 불편사항을 인식하고, 지자체 규제업무 담당자로 발령받아 중앙부처에서 검토의견을 여러 차례 회신받지 못했음에도 굳건한 개선 의지로 다년간 적극적인 건의를 통해 이루어낸 결실입니다.

**담당자 한마디**

**이 성 희** | 대전시 대덕구 기획홍보실

직원들에게 마침내 전국 무인민원발급기에서 지방세 납세증명서가 발급된다고 안내하였더니 '작은 지자체 공무원의 노력이 전국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게 됐다'며 '민원인의 불편사항에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중앙부처에 건의하면 결국 수용돼 개선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게 됐다'고 격려하였습니다.

# CHAPTER Ⅳ

# 끝까지 정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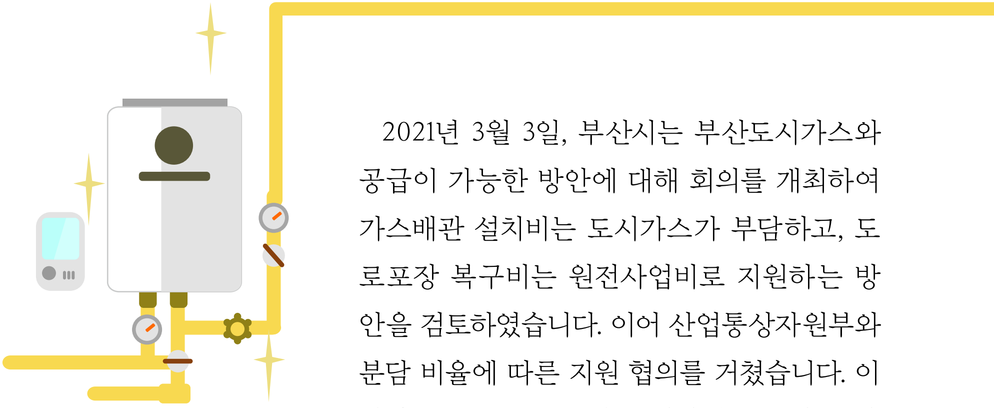
**01 모범실패 부문 | 부산시**
- 안되면 될 때까지! 도심 외곽 개발 소외지역 도시가스 보급 확대

**02 모범실패 부문 | 해양 경찰청**
- 재난안전 감시망 구축으로 어선 사고 예방 등 국민의 안전을 위해 끝까지 정진하다.

**03 모범실패 부문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 IOT 전파탐지 기술로 몰래카메라 디지털 성범죄 근절에 끝까지 도전하다.

# 안되면 될 때까지!
# 도심 외곽 개발 소외지역 도시가스 보급 확대

01 부산시



부산시 기장군 고리원자력발전소 주변 지역은 도심 외곽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있어 타 지역에 비해 낙후되고 난방에 취약한 장년층 분포도가 높은 지역입니다. 부산시는 2013년 3월, 고리원전 지역을 대상으로 도시가스공급 추진에 나섰지만 주거 밀집도가 타 도심지에 비해 낮아 수익성 결여 문제와 개인부담금 문제로 사업 추진이 중단되고 말았습니다. 2018년에 이르러 신고리 원전특별지원금을 활용해 도시가스 공급을 재추진했지만 '발전소 주변지역지원사업 시행요령'에 충족되지 않아 불승인되었습니다. 이에 부산시는 행안부에 시행요령 규제 개선안을 건의하였지만 '수용 불가'라는 회신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부산시는 주거 밀집도가 낮은 지역이라는 이유로 도시가스 보급 추진을 중단할 수 없었습니다.

2021년 3월 3일, 부산시는 부산도시가스와 공급이 가능한 방안에 대해 회의를 개최하여 가스배관 설치비는 도시가스가 부담하고, 도로포장 복구비는 원전사업비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였습니다. 이어 산업통상자원부와 분담 비율에 따른 지원 협의를 거쳤습니다. 이 협의를 통해 도로포장은 지자체 소유라는 사실과 기존 도로의 노후화로 재포장이 필요함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리고 총사업비 분담 비율을 산정하여 재협의를 실시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 규정의 문턱은 높았고, 또 다른 난관에 부딪치다.

2021년 6월 16일, 규제혁신추진단과 클린에너지산업, 부산도시가스와의 2차 간담회를 개최하고 공급 시기 조정 가능 여부와 공급이 가능한 원전기금 분담 비율 산정 등에 대해 논하였습니다. 이어 8월 4일에는 규제혁신추진단, 미래에너지산업과, 기장군, 부산도시가스와 3차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간담회 결과 조기

공급이 불가하다는 결론에 도달하고 말았습니다.

고리원전 지역에 도시가스 공급을 위해 힘차게 달려왔지만 규정이라는 문턱은 너무 높았습니다. 도시가스시설은 주민공공시설물로서 발전소 조성에 대한 지원은 가능하지만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시행요령」 제11조 의거하여 공공·사회복지사업으로 건립한 시설물은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현행 규정과 맞지 않아 사업 승인이 불가했습니다. 「도시가스법」에 의거하여 매설된 도시가스관은 사업자인 부산도시가스의 소유였습니다.

또한, 도시가스 소유 가스관 매설비용 전체 70%는 도시가스가 부담하고 도로포장 복구비용 30%는 원전지원금으로 충당하는 방안을 강구했지만, 대규모 투자에 비례한 적정한 수요처가 없을 경우에는 도시가스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여 조기 공급은 어렵다는 또 다른 난관에 부딪치고 말았습니다.

고리원전 지역에 도시가스 공급을 위해 힘차게 달려왔지만 규정이라는 높은 문턱과 또 다른 난관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 멈출 수 없는 발걸음, 새로운 시도로 두 마리 토끼를 한 번에!

이러한 난관에도 불구하고 낙후지역에 도시가스를 공급하겠다는 부산시의 의지를 꺾을 수는 없었습니다. 새로운 돌파구를 찾는 과정에서 정부 뉴딜 정책에 신재생에너지 '수소연료전지발전사업'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를 활용한 도시가스 조기공급 방안을 본격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당초 수요처 부족으로 인한 도시가스 공급사업의 수익성이 떨어지는 문제는 원자력특별지원금을 수소연료전지발전 사업에 투자하여 수익성을 확보하는 방안으로 해결이 가능한지 검토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방식으로 발전소를 건립한다면 부산도시가스는 도시가스 조기공급에 협조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수소연료전지발전소는 위험하다는 지역 주민의 부정적 인식을 전환하기 위해 수차례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면담을 실시하여 수소연료전지발전소의 안전성에 대해 설명함과 동시에 해당 사업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도 함께 형성하였습니다.

부산도시가스, 한국남동발전 등 여러 관계자들이 모여 수소연료전지사업 추진 실무회의를 진행하였고, 수소연료전지발전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갔습니다. 그 결과 부산시는 한국남부발전, 부산도시가스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2022년 6월, 발전소가 설치될 부지 선정까지 완료하였습니다. 2023년 상반기에는 해당 부지 매입과 더불어 사업 기본설계를, 하반기에는 수소연료전지 공사계약과 함께 공사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은 가스공급관도 필요하기 하기 때문에, 가스공급관 공사도 2023년 상반기부터 함께 시행될 예정입니다. 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 끝에 2025년 이후에 착공될 예정이었던 발전소 공사는 2년을 앞당겨 2023년 하반기에 조기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5년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내다보았던 공사 기간도 2년 이내로 단축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지역 내 도시가스 조기공급을 실현하고자 관계기관과의 업무협약 체결을 시작으로, 주민설명회 그리고 발전소 부지선정까지, 불가능해 보였던 일들이 하나둘씩 해결되기 시작하니 어느덧 공사가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아직 사업의 첫 삽을 뜬 것에 불과하고, 아직 가야 할 길은 멀고 멀지만, 부산시는 원자력발전소 소외지역에 도시가스 보급을 실현하기 위한 발걸음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담당자 한마디**

**전 혜 란** | 부산시 규제혁신추진단

원자력발전기금으로 도시가스 조기공급 추진을 위해 규제혁신을 추진하였으며, 사업비 분담비율에 따른 투자지원으로 조기공급을 시도하였으나 좌절되었습니다. 하지만 신재생에너지 '수소연료전지사업'과 연계하여 재도전을 추진 중입니다.

★★★ 우수상

모범 실패

# 재난안전 감시망 구축으로 어선 사고 예방 등 국민의 안전을 위해 끝까지 정진하다.

**02** 해양경찰청

선박 침수와 화재로 인한 해상조난사고 피해는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지만 예방 장치는 제자리에 머물고 있으며, 특히 정박 중 사고 시 초동조치가 불가능해 피해는 더욱 심각한 수준이다. 일부에서는 기지국을 활용해 무선 경보장치를 개발하기도 했으나 구매와 설치에 비용이 높아 상용화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해양경찰청은 관내 어선에 재난안전감시망을 구축해 어선 사고 예방은 물론 골든타임 확보에 나서고 있다.

## 실패했던 서랍 속 감지센서에서 해결의 열쇠를 찾다!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정박 중 침수로 인한 사고는 총 801건, 화재는 453건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이같이 선박 침수와 화재로 인한 해상조난사고 피해는 증가하는 추세이지만 예방장치는 미흡한 실정입니다. 정박 중 침수와 화재사고 시에는 초동조치가 불가능해 더욱 큰 피해를 불러오고 있습니다. 연안구조정은 정박대기 중 당직자가 부재하고 기존 감시장치는 선박 운항 시에만 작동하므로 정박 중 감시장치가 미흡한 점이 문제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해양경찰청은 이 같은 사고로부터 어업인들의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극복할 의지가 있으면 못 이룰 것이 없다'는 의지로 머리를 맞댔습니다. 팀원이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다양한 의견을 취합한 결과 집 안의 모든 사물을 스마트폰으로 원격 제어할 수 있는 '홈사물인터넷(IOT)'에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선박에 적용하는 방안이었습니다. 알뜰폰이나 에그를 이용한 데이터 사용, 그리고 연안구조정 내부에 CCTV와 함께 침수와 화재 감지센서를 설치하여 '스마트 통합 무선 감시망'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침수와 화재 센서는 각각 3만 원 내외, 데이터의 월 이용료 또한 1만 원 이내로 예산에 대한 부담 또한 덜어주는 획기적인 방안이었습니다.

사고로부터 어업인들의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극복할 의지가 있으면
못 이룰 것이 없다'는 의지로 머리를 맞댔습니다.

해양경찰청은 연안구조정의 상황을 실시간으로 전송받아 확인할 수 있는 경보관제 플랫폼 구축에 성공하였습니다. 이 같은 시스템을 통해 소내 근무자는 휴대폰 어플을 통해 연안구조정 내부의 상황을 실시간 전송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에 수신 즉시 신속한 초동대처가 가능해짐으로써 인적, 물적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해양경찰청은 시범운영을 통해 해경청 전 경비함정에 확대 설치 건의를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시범운영 결과 감시장치 역할을 톡톡히 해냈지만 관련 기능 검토 결과 해양경찰청 정보보안업무 세부시행 규칙 제44조에 의거하여 보안규정에 위배되어 전면 보류되고 만 것입니다. 하지만, 이미 실효성을 확인하였기 때문에 해경청 경비함정이 아니더라도 각 어민의 선박에는 충분히 설치가 가능하며, 그 효과도 클 것이라 생각하였습니다.





2022년 6월, 해양경찰청은 관내 어촌계 회의를 개최하고 감시센서의 필요성을 피력하였습니다. 그리고 관내 대형, 노령선 위주로 시범 설치할 4척의 선박을 선정하고 정박선 1척에 라우터를 설치하였으며 주변 선박까지 관제 시범 운영에 착수하였습니다. 드디어 2022년 7월 시범설치 선박을 대상으로 개별 감시망을 구축하였습니다. 향후 해양경찰청 무선랜 보안규정이 개선된 후에는 초 저예산으로 정박선의 상황을 실시간 모니터링할 수 있으며, 경비함정에도 적용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부두시설에 인터넷 공유기를 비롯해 증폭기 설치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담당자 한마디**

**윤 종 태** | 해양경찰청 평택해양경찰서

연안구조정 침수·화재사고 예방을 위해 추진한 'IOT 스마트 무선 감시망'이 해경청 내부 보안규정에 위배되어 사장 위기에 몰렸으나, 최근 연이어 발생한 어선 침수 및 화재 사고로부터 어업인의 재산을 지키고자 관내 어선에 시범설치 함으로써 어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 IOT 전파탐지 기술로 몰래카메라 디지털 성범죄 근절에 끝까지 도전하다.

03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불법촬영물에 의한 국민의 피해가 급증하면서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정부의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강력한 방지대책이 시행되고 있음에도 몰래카메라는 초소형, 실시간 무선전송 등 끝없는 진화를 이어가고 있으며 이에 불법촬영물의 피해자는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이에 방송통신전파진흥원(이하 'KCA')은 이러한 디지털성범죄 근절을 위한 방안 모색에 나섰습니다. 모텔이나 화장실 등 불특정 장소에 설치된 몰래카메라는 육안으로 확인하기 힘들다는 점을 감안하여 전파기반 탐지기술을 적용한 시스템에 주목하였습니다.

KCA는 다양한 전파 분야 공공서비스를 수행하고 있는 전문기관으로, 공공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책무 이행을 위해 AI 기술을 기반으로 한 몰래카메라 탐지기 개발에 착수하였습니다. 이에 'ICT기술을 적용한 몰래카메라 탐지기 개발'은 몰래카메라 유통 실태조사, 숙박업소 현장 조사 등의 현황 파악을 시작으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AI 기술을 적용한 실시간 탐지 등을 가능케 하는 시제품을 개발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먼저 국내 몰카 탐지기 실태조사, 분석과 전문가 의견 수렴에 나섰습니다. 실태조사를 통해 주파수 탐지는 민감도 조절이 불가능하고 영상신호 해석 기능이 미흡하며 고가의 가격이라는 문제점을 파악했습니다. 그리고 이에 다단계 주파수 감도를 탐지하는 등의 기능을 개선하고 AI 기반 전파, 영상 신호 해석 기능 탑재와 더불어 국내 대량 생산이 가능해야 하는 점 등으로 시제품 개발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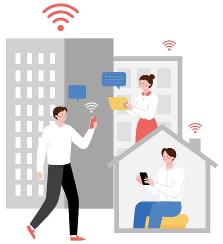
몰래카메라는 초소형, 실시간 무선전송 등 끝없는 진화를 이어가고 있으며 이에 불법촬영물의 피해자는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 몰래카메라 사각지대 해소로 국민 안심사회를 향하여

KCA는 민간, 학계와 힘을 모아 공동 연구·개발 협력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KCA는 연구개발을 총괄하고 개발 부분의 비용을 부담하며, 학계는 연구용역 수행과 더불어 시제품 개발에, 민간은 AI-SW 융합 개발 업체로 HW-SW 구현 자문을 담당하기로 하였습니다. 이 같은 협력체계를 통한 노력으로 드디어 특정 주파수 대역에서 높은 민감도를 설정하여 전파와 영상 신호 해석 기능을 탑재한 '상시형 무선전송 몰래카메라 탐지기' 개발에 성공하였습니다. 이에 숙박시설을 비롯하여 공공 화장실, 대학, 사무실 등 다양한 환경에서 시제품 시범 운영과 실시간 모니터링 테스트를 실시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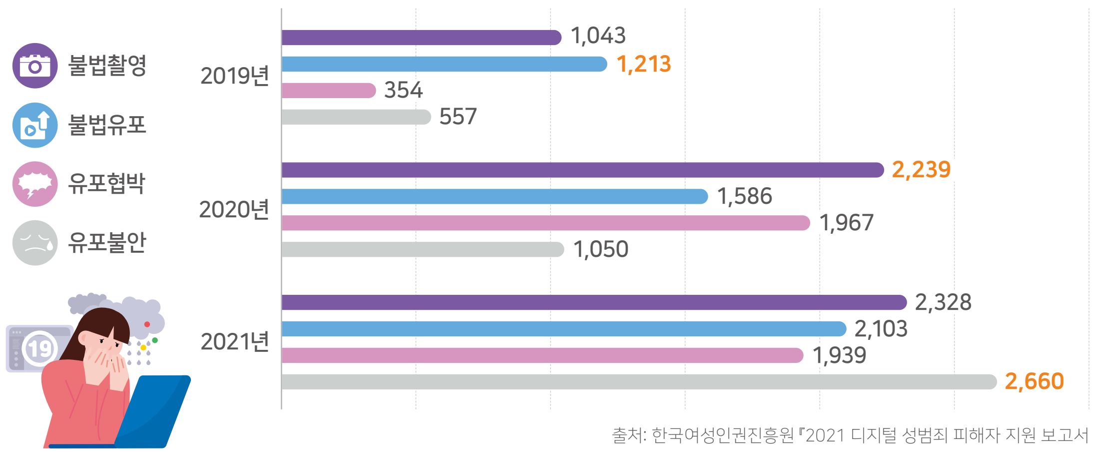
이 같은 탐지기 개발로 Wi-Fi 대역의 몰래카메라 신호 레벨을 확인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하지만 불특정 무선기기들이 다수 분포되어 있는 몰래카메라 설치 의심공간에서 몰래카메라 신호만 구분하기 어려운 한계에 부딪치고 말았습니다. 일정 수준 이상의 트래픽이 동일 패턴으로 발생할 경우 자동으로 탐지하는 데이터 트래픽 분석 기술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또한 AI·전파기술을 접목한 고정형 탐지기의 시제품을 개발하는 데는 성공했지만 고정



### 연도별 디지털 성범죄 유형별 피해 현황 추이

(단위: 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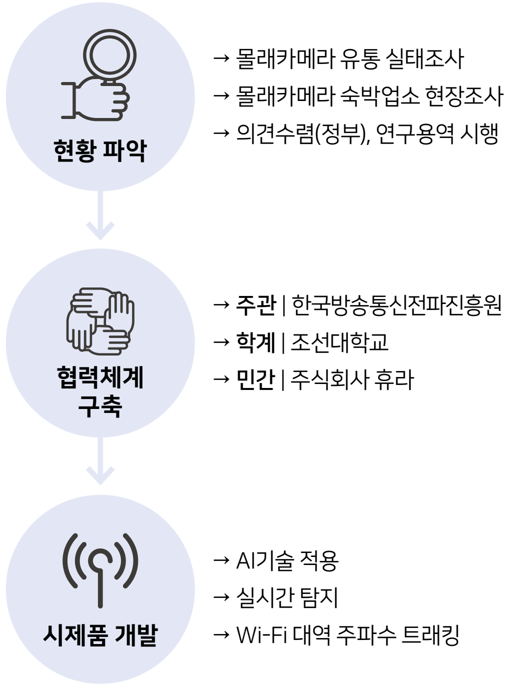

출처: 한국여성인권진흥원 『2021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보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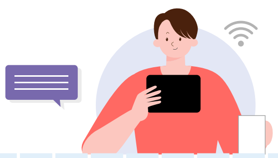


형 시제품의 예상단가는 약 300만 원으로 상당히 고가였으며, 이후 고도화를 통해 소형화 모델을 개발할 경우 추가 단가가 상승할 수 있다는 한계점도 드러났습니다. 시장 상용화를 위해서는 대량생산 등 원가절감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KCA는 문제점을 진단하고 이를 타개할 수 있는 해결방안을 모색해나가는 발걸음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현 시제품에 AI 데이터 트래픽 분석 기술을 탑재한다면 몰래카메라 송출 신호만 필터링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어 이를 통해 몰래카메라 사각지대를 해소함은 물론 국민 안심사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2023년,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몰래카메라 성범죄 방지' 사업의 고도화를 위하여 예산 확보를 추진하고 협력체계를 확대해 나갈 방침입니다.

### ICT기술을 적용한 몰래카메라 탐지기 개발 추진방향



**담당자 한마디**

**김 태 순**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n번방', '아동성착취 동영상 운영' 사건 등 불법촬영물에 의한 국민의 피해가 급증함에 따라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나날이 진화하는 불법 촬영 기술에 대응하기 위해 몰래카메라를 통해 실시간 전송되는 전파 트래픽 감지 기술을 접목시킨 'AI 기반 몰래카메라 탐지기' 시제품 개발에 나섰습니다.

적 극적인 자세로

어려움을 극 복하고

국민 행 복을 위해

끝까지 정 진한다


| | |
|---|---|
| **발행일** | 2023년 4월 |
| **발행처** | 인사혁신처 적극행정과<br>국무조정실 규제총괄정책관<br>행정안전부 지역활성화정책과 |
| **디자인·기획** | 디자인크레파스(02-2267-0663) |